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44-10

www.mafra.go.kr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2024. 3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1.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23
3. 2024년 농촌진흥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33
4. 2024년 농촌진흥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55
5. 2024년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67
6. 2024년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87

01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

2024. 3. 4.



농림축산식품부

순 서

| | |
|-----------------------------------|---|
| I. 추진성과와 평가 | 7 |
| II.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8 |
| III. 2024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 9 |
| 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 |
| ②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 |
| ③ 과학적 수급관리 및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 강화 | |
| ④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 |
| ⑤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 |

〈붙임〉 '24년 주요 대책 발표 일정(안)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 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업혁신 가속화를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 병해충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보급(28종, 1,029농장), 온실에 **첨단 ICT 기자재** 보급 확산('22: 7,239ha → '23: 7,858)
 - 전체적 수출 감소에도 '23년 K-Food⁺ 수출은 전년비 **2.6% 증가한 121.4억불로 역대 최고 실적**(농식품 91.6, 3% ↑, 전후방산업 29.8, 1.2% ↑)
 -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축소할 **온라인도매시장 출범**('23.11월)
- 급락했던 쌀값 회복 및 재해지원 등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 뒷받침**
 - 밥쌀 재배면적 감축(19천ha) 등 선제적 대응으로 **'23년 수확기에 시장격리 없이 쌀 수급안정 및 쌀값 20만원/80kg 약속 달성**
 - **6~7월 집중호우**시 복구비 보조율 상향 및 단가 현실화, 특별위로금, 농기계·설비 보상 등으로 피해가 큰 농가는 기존 대비 **3배 수준 지원**
- 6년만에 처음으로 식량자급률 상승세 전환 및 가축전염병 발생 조기 안정**
 - 전략작물직불제 및 가루쌀산업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지속 하락하던 밀·콩 등 기초식량 자급률 상승 전환
* 자급률('21 → '22 → '23p) : (밀) 1.2% → 1.3 → 2.0, (콩) 23.7% → 28.6 → 33.6
 - 민간과 협업한 전국 백신접종 등 신속한 조치로 **럼피스킨(10.19~11.20, 107건), 구제역(5.10~18, 11건)** 등 축산 피해 최소화
- 농촌지역 활성화 촉진 및 농지규제 합리화**
 - **농촌공간재구조화법**('23.3월) 및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23.8월) 제정 등 농촌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정책 기반 구축
 -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
* 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23.12월)

2 개선 필요사항

- 농산물 수급안정 등 현안 대응과 함께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 보완 필요**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람·자본 유입을 위한 혁신 필요**

II.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여건

- 첨단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첨단기술과 타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청년층의 스마트농업 등 취·창업이 증가, 도시민을 위한 경제적 기회도 확대
- 고금리·고물가·국제정세 불안, 자연재해 발생 빈도·강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전장치 확충이 중요
 - 농촌인구 감소·고령화 및 지역·산업간 격차에 따른 농촌지역 성장동력 약화 등 소멸 이슈 심화

⇒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 농업·농촌에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혁신할 필요

2 업무 추진 방향

◇ 농업·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3대 농정 방향 대전환을 토대로 적극적·공세적 정책 추진

- 첨단기술 적용, 규제혁신으로 사람·자본이 선순환되는 미래산업으로 전환
 - 농업의 디지털 전환 및 R&D 체계 혁신 등을 통한 고소득 창출 및 농식품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 농업혁신을 뒷받침하고 경영위험을 줄여주는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
 -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식량안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
- 농촌을 국민들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있는 공간으로 전환
 -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지역별 재생계획 수립, 사회 및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 재설계 등 사람과 자본 유입 기반 마련

Ⅲ. 핵심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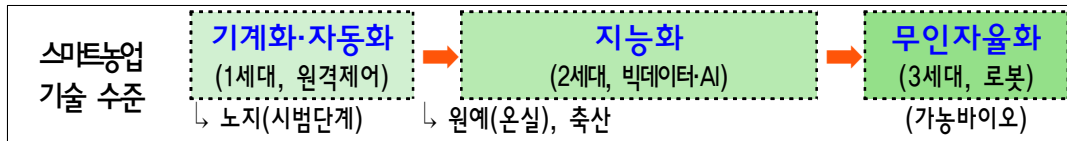
1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1-1 ICT, AI 등을 활용한 생산-가공-유통 전반의 디지털 전환

◇ H/W에서 S/W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첨단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전후방 산업 육성

* 스마트 온실/축사 : ('23p) 14% / 23% → ('24p) 18 / 27 → ('27p) 30 / 40

□ 온실·축산·노지 등 분야별 수준에 맞는 스마트농업 고도화



- 온실은 하드웨어(1.5세대 수준)에서 소프트웨어(2세대) 중심으로 전환 촉진
 - 원예 우수솔루션 개발(23개 컨소시엄 지원) 및 농가(1,100개) 보급(3월), 인공지능(AI) 기반 모델 상용화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개선(4월)
- 축산은 질병, 약취, 생산성 등 문제 해결형 최적기술 지원
 - 축종·유형별 사육모델 현장 보급 확대(10개 → 20),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0월)
- 노지는 주산지 중심의 농작업 기계화로 효율성 제고
 - 발작물(마늘·양파) 주산지 기계화 우수모델 지정 확대(6개소 → 15), 자동화 시범단지 운영(4월, 나주)

□ 수직농장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설치 가능(농지법 시행령 개정 '24.下)토록 하고, 산업단지에도 입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
-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포함(4월)

※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3월 수직농장 포함) 및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12월 수립)

□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제품 개발·실증 등을 지원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24~’26, 3개소), 전용펀드 확대(100억원 → 200) 및 신규 R&D 추진(38개, 114억원)
- **그린바이오 연구·생산 거점기관 조성 확대**(9개 → 11) 및 소재 첨단 분석시스템 신규(2개소) 구축, **벤처캠퍼스** 1개소 추가 조성(누계 5개소)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5천억 원 거래 달성(’23.11월 개장, 53억원 매출)**

-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는 전부 판매자로 가입(~3월)토록 하고, **전속 출하 체계**를 갖춘 **전문조직****(26개소 → 35) 육성

* 스마트 APC(누계) : (’23) 14개소 → (’24) 26 → (’27) 100

** 산지 교섭력 및 판매전문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조직을 계열화하여 통합마케팅 실시

-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現 거래규모 50억 원), 정책사업(산지유통활성화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참여 확대* 유도

* (’23) 340개사 (판매자 114, 구매자 226) → (’24 목표) 1,917 (판매자 938, 구매자 979)

- 정부 비축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취급 품목 확대(’24.下)**
- 거래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공동구매, 장기 예약거래 등 신규 거래 방식 도입,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플랫폼 기능 고도화**

□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개편 및 기술 금융 활성화**

- 기관별 특화연구,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 **‘꼭 필요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3월)

- **3대 중점 분야**(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연구개발 집중 투자**

* ’24년 3대 중점 분야 투자액 : 941억 원 (’24년 농식품 R&D 예산의 43.6%)

- 민간투자사 대상 **농식품 기업정보 제공 플랫폼*** 본격 가동(3월~), 민간 모태펀드 조성** 기반 마련(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 ’24.下)

* 창업·투자 지원정보와 산업동향, 경영체 정보 통합 제공, 경영체-투자자 매칭서비스

** 최초 500억원 → ’27년까지 1,000억원 → 이를 마중물로 3,000억원 이상 자펀드 결성

1-2 청년 세대 육성

◇ 청년층의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

*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 ('22) 1.2만명 → ('23) 1.8 → ('24) 2.2

□ 청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농지·시설·자금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공공임대, 임차임대, 전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 확대(8,577억원, 2,759ha → 12,413, 4,210)
- 혁신밸리 보육센터(年208명, 20개월) 수료생의 창업기반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최대 3년) 4개소 추가 조성(누계 13개소)
* 청년농 '교육(혁신밸리 창업보육센터)→ 예비창업(임대형스마트팜)→ 취·창업' 연결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규모(514억원 → 689) 및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 확대(1인당 3억원 → 5, '23.10월~)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확대(4천명 → 5) 및 청년농촌 보금자리 8개소 추가 조성(누계 17개소)

□ 승계농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도 개선

- 가업 승계시 농지 분할 방지 등을 위해 가족농의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 완화(농어업경영체법 개정, '24.下)
- 승계농의 시설·기술 고도화, 펀드 유치, 컨설팅 등 지원

□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까지 정책지원 범위 확대

- 청년 창업을 뒷받침할 정책사업 **One-Stop** 지원 서비스 제공(6월~)
-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 문화·관광, 농기자재,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취·창업 컨설팅 지원
- 청년 등 대상 펀드 추가 결성(2,000억원 규모)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영파머스 펀드 투자사례 : 농업회사법인 (주)프레쉬벨

- (투자받은 금액) 총 20억원('22년)
- (성과) 어린이 착즙주스 수출확대, OEM/ODM 국내외 수주 확대, 롯데백화점 입점으로 제품 인지도 확산, 미국 등 9개국 수출
- (수출액) '21년 13.4억원 → '22년 66.4



1-3 K-Food+ 수출확대 및 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

◇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증가세를 가속화하고, 정상외교를 활용한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적 농업외교 전략 추진

* K-Food+ 수출액 : ('23p) 121.4억불 → ('24) 135

□ 품질 고급화 및 물류체계 선진화, 신규시장 개척으로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 '제2의 딸기' 육성을 위해 품종개발 등 품목별 전략* 추진, 신선도 제고를 위한 특화 물류체계 구축

* (포도) 프리미엄 마케팅, 마켓테스트, (파프리카) 시장 다변화를 위한 품종 연구개발

○ 할랄·중남미 등 新시장 진출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시장개척, 국제미식행사* 첫 유치 및 해외 우수 한식당 확대**

*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 글로벌 미식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시아 최고 식당 50선 발표

** '23년 뉴욕·파리·도쿄 총 13개소 선정 → '24년 런던 추가, 총 30개소 선정 추진

□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전후방산업 수출 35억불 달성

○ 중동 정상순방('23.1월, 10월) 계기로 성사된 기업 MOU(7건)가 수출·수주 계약 체결로 이어지도록 One-Stop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한 밀착 지원

- 사우디 시범온실 조성(~'25), 중동 등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확대 지정(신규 4개소), 보험료 할인 등 무역보험 우대 추진

○ 중국 등 GMP* 의무적용 국가의 시장개척을 위하여 수출 희망업체 대상 동물용 의약품 GMP 제도 신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등의 안전·유효성 보장하는 제조·품질 관리 기준

□ 'K-라이스벨트' 본격 추진 등 농업기술 해외 전파 확대

○ 현지 7개국(410ha)에서 벼 종자 3천톤으로 생산 확대('23년 2천톤)

* 가나·세네갈 등 종자보급 시범마을 선정, 현지품종과 비교하여 K-종자 우수성 실증 추진

○ K-농기자재 보급 확대를 위한 중고농기계 지원 ODA 사업* 추진

* '24년 세네갈 중고 농기계 지원 및 수리센터 구축 지원사업(신규 1,000백만원)

※ 국가·현안·품목별 농업외교 추진전략 마련(10월)

2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2-1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 수입 변동성 개선, 직불제 확충, 위험관리 강화 등 두터운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농가 수입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수입보험 확대 등 지원체계 보완
 - * 수입보험 대상품목: ('23) 7개 → ('24) 10개 내외(+보리·옥수수)
 - 수확량 파악방식 개선,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 확대 기반 구축
 - *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가칭)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 추진('24)
-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10만원 인상**(120만원/호 → 130), 경관보전직불 확대(99억원 → 168) 등 선택직불 확충
 - 기본직불 보완, 선택직불 확충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24.下)

□ 농업재해 등에 대응한 위험관리 강화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지역 확대*, 병충해 피해보상 상품 확대('24.下)
 - * 대상품목/전국단위 운영: ('23) 70개/47개 → ('24) 73(+두릅·블루베리·수박)/56
- 농업재해 복구지원 개선방안* 마련('24.上, 행안부·기재부 등 협의)
 - * 개선방안(안) : 대파대·입식비 등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신규지원 항목 추가 등

□ 비료·사료·유류 등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농업인력 공급 확대

-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차액 지원(288억원) 및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1조원, 금리 1.8%),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원) 지원
-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19개소 → 70) 확대
 - * 고용허가/계절근로: ('23) 14,950명/34,614명 → ('24) 16,000/45,631
 - 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개소) 및 숙소 설치요건 개선*('24.上)
 - * 근로자 숙소 설치를 위한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 확대(660m²/세대 → 1,000)

2-2 튼튼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 전략작물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밀·콩 자급률 : ('22) 1.3%/28.6% → ('23p) 2.0/33.6 → ('24p) 4.2/35.3

□ 가루쌀·밀·콩 등 주요곡물 자급기반 확충

○ 전략작물 직불제 단가 인상*,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

* 논콩가루쌀(만원/ha) : ('23) 단작 100 / 이모작 250 → ('24) 200 / 350, ** 옥수수·팥·녹두 추가

○ 가루쌀 생산단지 **1만ha, 5만톤**('23년 2천ha, 1만톤) 생산 확대, 식품·외식 업계 대상 가루쌀 신제품 개발 및 밀가루 대체 등 소비 지원

○ 밀·콩 전문생산단지* 및 비축** 확대, 제품개발 지원 등 소비 기반 마련

* ('23) 10천ha/9천ha → ('24목표) 12/10 ** ('22) 17천톤/19천톤 → ('23) 19/27 → ('24목표) 25/60

□ 사전 수급 관리 강화 및 수요 확대를 통한 쌀 수급 안정

○ 모내기 전 적정 생산 유도, 생육 중 사전 수급 조절, 수확 후 보완 대책 등 **3중의 쌀 수급안정 체계 구축**

- 과학적인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24.下)



○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40만톤 → 45) 확대 등 수급안정 강화

○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 인상(1천원 → 2) 및 지원대상 확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10대 가공품** 수출 확대**('23: 217백만불 → '24: 234)

* 지원학교/단가/예산 : ('23) 144개교 / 1천원 / 2,501백만원 → ('24) 186 / 2 / 9,348

** ①가공밥죽 ②도시락,김밥 ③떡볶이 ④냉동떡 ⑤증류주 ⑥음료 ⑦쌀국수 ⑧혼합면 ⑨빵 ⑩과자

□ 농업수리시설 안전관리 등 농업생산기반 관리 강화

○ 홍수 등 피해 대비 저수지 퇴적토사 준설(30억원 → 430) 등 수리시설 개보수 투자 확대(6,518억원 → 7,462)

- 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 및 배수장·배수로 등 확충(3,703억원 → 4,535)

* (현행) 논 20년/밭 30년 → (개선) 20년 이상/ 30년 이상(지역작물에 따라 한도 없이 강화)

○ ICT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및 원격조작 장비 설치

3 과학적 수급관리 및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 강화

3-1 수급예측에 기반한 자율적·선제적 수급관리

◇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체제로 전환

* 5대 채소 평균 가격변동률 : ('20~'23) 13.17% → ('24~'27) 11.33

□ 주요 채소·과일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생산자단체-지자체-정부 협력 강화

-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23.7~12월, 마늘·양파) 대상 품목(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3개 시·도 → 6) 확대

* (현장사례) 9월 재배의향조사 결과 양파 생산과잉 예상으로(전년比 +6.4%), 농가 대상 재배면적 관리 중요성을 적극 홍보·교육한 결과 재배의향 전년比 +4.7%로 증가폭 축소

- 주산지 중심으로 광역단위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 *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정부·지자체·농경연 등 참여
- 자조금단체의 역할·기능 명확화를 위한 **자조금법 개정 추진('24.下)**
-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확대***를 위한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
 - * 중점품목(배추·무·마늘·양파) 생산량 대비 가입률 : ('22) 17% → ('24) 23 → ('27) 35
 - ** 국고지원 한도 실질적 확대(평년가의 12% → 20)로 가입농가의 소득보장 강화
- 사과·배 등 생육관리협의체(1월)를 통해 냉해 등에 선제 대응하고,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3월)**

□ 축산물 수급관리 체계 개선

- **한우 생산자단체 중심의 사전 생산조정(암소감축·송아지 입식조절) 등을 위한 수급조절매뉴얼 정교화*** 및 **한우 관측체계 고도화****
 - * 미래 수급불안 상황 3~4년 전 경고, 생산자기관별 역할 및 위기 단계별 행동요령 구체화
 - ** (기존) 도축·사육 등 공급 중심 → (개선) 경영·소비 요소 반영(사료비·경기상황 등)
-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 역할 제고 등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 축산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마련(6월)

3-2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예방

-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 방식 확산 및 가축방역 대응체계 개선
* 친환경 집적지구 : ('23) 36개소 → ('24) 51

□ 친환경·저탄소 영농 확대 및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행(90억원)
* 중간 물떼기, 논물 얇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저메탄사료·질소저감사료 급여 등

-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에 온실가스 저감 공정 설치 의무화(4월), 바이오차(2개소 → 3) 및 에너지화 시설(8개소 → 10) 확대



<칠성에너지 바이오가스 처리시설>

-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 확대(한우 → 돼지고기·우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사료 보급('24.1분기~) 등 축산분야 탄소 감축 실천
-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간척지 활용 영농형태양광 실증 착수(300kW) 및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4개소 추가 조성(누적 12개소)

□ 친환경 농축산업 생산 기반 확충, 판로 다변화 및 소비 촉진 추진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직불제 개편안 마련('24.下)
- 친환경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시설·장비, 컨설팅 등을 지원해 생산거점으로 육성(36개소 → 51)
- 자조금단체·대형마트 등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실시(연중)

□ 농가·계열사 책임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 등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농장이 많은 18개 시·군 특별관리*, 계열사의 자율적 방역관리 책임 강화
* 20만수 이상 통제초소, 농장 내 알·난좌차량 출입금지, 알 환적장 운영, 소독 강화 등
- 검사·소독·방제 분야 민간 전문인력 활용 확대, 민간전문방역업체(살처분·매몰업체 등) 등록·관리제도 신설(가전법 개정, '24.下)

4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4-1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경제 활성화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창출, 활력 제고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틀 전환

※ '농촌 소멸 대응 추진 방안' 마련·발표('24.3월)

□ 농촌에 외부 인구·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농촌 빈집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25억원),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및 조건 완화*(1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운영(11월)
 - * ①지역 확대(5개도 → 전국), ②대상 확대(50→500채) ③영업일 수 제한(300일) 폐지 등
-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5월)
-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마련('24.下)

□ 농지에 대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규제 완화

- 3ha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1천ha),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의 임시거주가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2.21일 민생토론회)
- 농업인,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농지법령 개정('24.下)

□ 먹거리,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초기 성장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시설 설치 특례** 확대

* 상환기간 연장, (시설) 3년 거치 7년 상환→5년거치 5년/ (운영) 2년 일시→2년거치 3년

** (대상) 사업 개시 후 2년 이상→ 폐지, (범위)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 용도변경 등 추가



<사회브랜딩 경영체 청년연구소>

- 마을·여행사 등이 공동으로 특화 관광상품을 판매·운영(20개소), 민간 협업을 통한 농촌형 위케이션 활성화 지원

4-2 농촌공간계획 본격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 ◇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지역단위 중장기계획에 따른 주거·경제·사회서비스 재구축
- * 농촌협약 선정 시군 : ('23, 누적) 75개 → ('24) 95

□ 시·군 단위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제도화 마무리

-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 목표 등 농촌공간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 마련**(4월)
 -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 확정('24.上), 사례 제시를 위해 관계자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 등 지원을 통해 **지자체 시범계획 수립**(5개 시·군)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3월)에 맞춰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 농촌마을보호지구에 의제되는 **용도지구(보호취락지구)**를 국토계획법에 신설('24.上,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 자연취락지구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된 위해시설을 불허하고, 정주성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등은 허용

□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 추진

- 농촌지역의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 지속 확대**(75개 → 95)
-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사업 통합 지원 방식의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개선 방안 마련**(4월)
 - * 공간정비 등 사업을 농촌공간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통합지원 방식 강화 등

□ ICT 등을 활용한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

- **비대면 진료** 시범도입, **스마트 교통모델**을 **활용***한 중심지·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 마을 공동체 활용 교통서비스 제공, 실시간 수요 반영 주문형 셔틀 등 운영형태 다양화
- **농촌왕진버스*** 사업 신규 도입, **여성농 특수건강검진**(3만명, 50개 시·군) 확대
 - * 의료단체 또는 병의원 등과 협업하여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양·한방, 치과·안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32억원)

5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5-1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

◇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 '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을 위한 차질 없는 이행 준비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24.2.6) → '27년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 금지

- 실태조사 및 농가 등 신고(~5월), 이행계획서 제출(~8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9월)

* (주요내용) 관련 업계 현황 및 지원방안, 소유권 포기권 보호방안, 연도별 실행계획 등

-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세심한 현장 컨설팅 등 밀착지원 및 전담조직 운영

* 시설 철거 및 업종 전환 지원 + 농가 경제활동 재개 및 이행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

□ 불법영업장 등 동물복지 취약분야 개선

- 동물학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증진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5~29)」 수립(12월)

- 지자체 보호센터 확충(신규 11개소) 및 민간보호시설 입지·환경 개선*

* 입지이전·재건축환경개선 지원예산 증액(23:18억→24:22), 시설개선 컨설팅 지원(30개소)

-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38억원 → 47)

- 생산업 부모견 등록 도입 등 분양·양육 체계 개편 및 점검 강화(24.上 실태조사)

□ 개 물림 사고 예방 및 맹견으로 인한 갈등 완화

- 맹견사육 허가제도(맹견사육 희망시 허가 의무), 기질평가제도(개의 공격성에 대한 평가) 등 맹견 관련 신규 제도 시행(4월)

- 맹견 특화 시설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 맹견 관리 강화 등 맹견 취급자 및 맹견 양육자 준수사항 강화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신설·시행(4월)

5-2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동물의료체계 개선

◇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 펫푸드 수출액 : ('23) 150백만불 → ('24) 154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제도·인프라 등 기반 조성

- 체계적 산업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 마련('24.下)
 - *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벤처 양성, 투자 지원, 특구 지정, 융합형 인재 양성 등
-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펫푸드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 마련

- 반려동물 제품·서비스 연구·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 조성

* 사업 지침 마련 및 공모('24.1월), 사업대상자 선정('24.5월), 사업 기본계획 수립('24.下) 등을 통해 One-Welfare Valley 착공('25.上) 및 완공('27)



<프랑스 로알케닌 캠퍼스>

-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신제품의 기호성 등에 대한 실증 및 R&D 등 기업 지원

- 펫푸드 수출 유망시장(동남아 등) 조사 등 시장개척 지원 강화

* 수출박람회 개최,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해외인증, 현지 법률 자문 등 지원

□ 동물 의료 투명성·전문성 제고 및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알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및 사전 정보제공 항목 확대*

* 다빈도 항목 표준진료절차 고시(3월), 진료비 게시(4월, 진찰·입원 등 11개 → CT·MRI 등 20개) 및 사전 구두고지 확대(12월, 수술 등 중대진료 → 모든 진료) 검토 등

-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마련(12월)

* 전문과목 표시기준, 상급병원 지정기준 및 운영 세부 방안 마련

-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12월)

* 동물보건사의 역할 정립·확대, 표준교육과정 구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제도 개편,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개선방안 등

| 발표시기 | 중요 대책(안) | 소관 |
|------|----------------------------|-----------|
| 1월 |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 유통소비정책관 |
| 2월 | K-Food+ 수출 확대방안 | 식품산업정책관 |
| | 한식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전략 | 식품산업정책관 |
|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계획 | 유통소비정책관 |
| | 쌀 적정생산 대책 | 식량정책관 |
| | 식량원조 사업 계획 | 국제협력관 |
| 3월 |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 농식품혁신정책관 |
| | 농식품 R&D 혁신방안 | 농식품혁신정책관 |
| | 농촌소멸대응방안 수립 | 농촌정책국 |
| |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 유통소비정책관 |
| 4월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수립 | 농촌정책국 |
| | 거점 스마트 APC 구축 활성화 계획 | 유통소비정책관 |
| 5월 | 국가식품클러스터 중장기 발전 방안 | 식품산업정책관 |
| | 농어촌 민박제도 개선 방안 | 농촌정책국 |
| |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 농업정책관 |
| | 제3차 축산 계열화 사업 발전 기본계획 | 축산정책관 |
| |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 축산정책관 |
| |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 축산정책관 |
| 6월 | 농업재해 복구지원 제도개선 | 농업정책관 |
| |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 | 식량정책관 |
| | 수급안정 기능 강화 등 축산자조금 기능강화 방안 | 축산정책관 |
| 7월 | 농업용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 농식품혁신정책관 |
| 8월 |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 유통소비정책관 |
| 9월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
| |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방안 | 농촌정책국 |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 농촌정책국 |
| |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 식량정책관 |
| |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 방역정책국 |
| |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제도 시행계획 | 유통소비정책관 |
| 10월 | 국가·현안·품목별 농업외교 추진전략 | 국제협력관 |
| |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 유통소비정책관 |
| 11월 | 농촌주거대책 | 농촌정책국 |
| |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 농업정책관 |
| 12월 |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5~'29) | 농식품혁신정책관 |
| |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 농업정책관 |
| | '25~'2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
| |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
| | 가축전염병 방역 중장기 계획 수립 | 방역정책국 |

02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5.(화) 조간 배포 2024. 3. 4.(월) 10:30

“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디지털전환, 세대전환, 농촌공간전환 등 3대 대전환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 **지난 해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 국제 정세 불안 등 여건에도 식량안보,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서 성과 창출**
 - 쌀값 회복(수확기 평균 202,797원/80kg), 콩·밀 자급률 상승, K-Food⁺ 수출 121억불 달성, 가축전염병(구제역·립피스킨) 조기 안정,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 **올해는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등 5대 핵심과제 성과 창출 및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
 - 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 온실·축산 2세대로 전환, 수직농장 규제 완화, 스마트농업육성기본계획 수립(12월)
 - 청년 대상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45%↑), 가공관광외식 창업 One-stop 서비스(6월)
 - ②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마련(24.下), 수입보험 품목 확대(7→10),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 상품 확대(24.下), 농업재해 복구지원 개선방안 마련(24.上)
 -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차액(288억원)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원) 지원,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확대(19개소→70) 등 추진
 - ③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및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 강화**
 - 사과·배 생육관리협의체 운영(1월~) 및 방상팬·영양제 등 사전조치,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3월)
 - ④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으로 재구조화**
 -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특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마련(24.下)
 - 농촌공간계획 10년단위 기본방침 마련(24.上), 비대면 진료 및 스마트 교통모델 도입
 - ⑤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마련(9월), 동물복지종합계획(25~29) 수립(12월)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24.下), One-Welfare Valley 조성(24~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 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상승, 스마트농업 확산, K-Food+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

금년에는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바탕으로 ①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②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③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④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⑤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Ⅰ 첫째,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한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ICT,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시너지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1,100호,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79억원→180)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8년→16),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확대(8,577억원→12,413)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4천명→5),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 확대(1인당 3억원→5), 임대형 스마트팜(9개소→13), 농촌보급자리(9개소→17)도 대폭 늘린다.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Agribiz+)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6월)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추가 결성(2,000억원)한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 센터를 구축(3개소)하고, 전용펀드(100억원→200) 및 연구개발(38개, 114억원)을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연구생산 거점기관(9개→11) 및 벤처캐피트 조성을 확대(4개소→5)한다.

K-Food⁺ 수출 135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제2의 딸기 육성, 물류체계 선진화(585억원) 등과 함께 국제 미식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13개소→30)도 추진하면서, 동남아,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수립(10월)한다.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중동 등 신흥시장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불까지 확대해 나간다.

② 들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식량자급률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24.下)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확대(7개 → 10개 내외)한다. 또한,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련*('24.上)한다.

* 개선방안(안) : 대파대·입식비 등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신규지원 항목 추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원)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원)을 지원한다. 농가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대폭 확대(19개소 → 70)하고 근로자 기숙사 설치(10개소)도 확대한다.

* 고용허가/계절근로 : ('23) 14,950명/34,614명 → ('24) 16,000명/45,631명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 및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쌀은 모내기전, 생육,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40만톤→45)도 확대한다. 현장 수요가 많은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논콩·가루쌀 : ('23) 단작 100만원/ha, 이모작 250 → ('24) 200, 350

** 가루쌀·밀·콩 전문생산단지 : ('23) 2천ha/10천ha/9천ha → 1만ha/12천ha/1만ha

*** 지원학교/단가/예산 : ('23) 144개교 / 1천원 / 2,501백만원 → ('24) 186 / 2 / 9,348

③ 셋째,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관리와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을 강화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제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1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철저히 추진한다. 또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개 시·도→6)한다. 채소 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여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24. 下)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규모를 5천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 국고지원 한도 실질적 확대(평년가의 12% → 20)로 가입농가의 소득보장 강화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하고,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개소→51)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24.4월), 바이오차(2개소→3) 및 에너지화 시설(8개소→10)을 확대하여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24.1분기~)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럽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주체의 책임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소독·방제는 민간전문방역업체 등록·관리제도를 신설(가전법 개정, '24.下)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4 네째,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하여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계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1천ha)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4.3)에 맞추어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4월)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지원(5개 시·군)하는 등 농촌이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농촌공간 계획을 중심으로 농촌협약도 지속 확대(75개→95)하면서 사업통합 지원 등 농촌협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ICT 기술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선도적으로 활용한다. 복지부와 협력하여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한다. 농촌왕진버스(32억원), 여성농업인건강검진(3만명, 50개 시·군)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도 확충해 나간다.

5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모멘텀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 및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하여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농가신고(~5월) 및 이행 계획서(~8월) 제출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9월)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추어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5~’29)」을 수립(12월)한다. 맹견사육 허가(4월), 기질평가(4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4월), 생산업 부모견 등록(4월, 2년 유예)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24.下)하고,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 및 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를 신규로 조성(’24~’27)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11개→20)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송미령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 이라고 하면서,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붙임.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인포그래픽

별첨. 2024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김재형 (044-201-1311) |
| | | 담당자 | 사무관 | 여종수 (044-201-1317) |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농업의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농촌공간 전환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1 디지털 전환·기술 혁신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스마트 농업 확산 | 가공·유통 디지털화 | 청년 세대 육성 | K-Food* 수출확대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문제해결 최적기술 지원 축종별 사육모델 개발·보급 노지 농작업 기계화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24~'26) 구축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5천억 원 거래 달성 | <p>영농경직지원 대상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p> <table border="1"> <tr><th>연도</th><th>4천명 '23</th><th>5천명 '24</th></tr> <tr><th>면적</th><td>8,577만㎡</td><td>12,413만㎡</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자·사실·자금 등 맞춤형 지원 전후방 비즈니스인 Agribiz* 취창업 장 마련 | 연도 | 4천명 '23 | 5천명 '24 | 면적 | 8,577만㎡ | 12,413만㎡ | <p>K-Food* 수출액</p> <table border="1"> <tr><th>연도</th><th>121.2억 '23</th><th>135억 '24</th></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종개발 등 품목별 전략추진 할랄·중남미 등 新시장 진출지원 송농 등 스마트팜패키지 수출 확대 | 연도 | 121.2억 '23 | 135억 '24 |
| 연도 | 4천명 '23 | 5천명 '24 | | | | | | | | | | |
| 면적 | 8,577만㎡ | 12,413만㎡ | | | | | | | | | | |
| 연도 | 121.2억 '23 | 135억 '24 | | | | | | | | | | |

2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 튼튼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 튼튼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 | | | | | | | | |
|--|----------------|---------------|--------------|---|----|---------------|---------------|----|-----------|-----------|
| <p>수입보험 대상품목 확대</p> <p>품목 7개 '23 → 10개 내외 '24</p> <p>소농직불금 지급단가 10만 원 인상</p> <table border="1"> <tr><th>연도</th><th>120만 원/톤 '23</th><th>130만 원/톤 '24</th></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재해 복구 지원 개선방안 마련 농업재해보험 병종해 피해 보상 상용 확대 *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 연도 | 120만 원/톤 '23 | 130만 원/톤 '24 | <p>논콩·가루쌀 단가 인상</p> <table border="1"> <tr><th>연도</th><th>250만 원/ha '23</th><th>350만 원/ha '24</th></tr> </table> <p>전략작물직불 확대</p> <table border="1"> <tr><th>연도</th><th>27천ha '23</th><th>45천ha '24</th></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및 품목확대(옥수수, 팥, 녹두) 모내기 전, 생육 중, 수확 후 3종의 쌀 수급안정 체계 구축 | 연도 | 250만 원/ha '23 | 350만 원/ha '24 | 연도 | 27천ha '23 | 45천ha '24 |
| 연도 | 120만 원/톤 '23 | 130만 원/톤 '24 | | | | | | | | |
| 연도 | 250만 원/ha '23 | 350만 원/ha '24 | | | | | | | | |
| 연도 | 27천ha '23 | 45천ha '24 | | | | | | | | |

3 과학적 수급관리 및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 강화

| 지율적·선제적 수급관리 | 친환경·저탄소 영농 확대 |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면적 사전관리 대상 확대(마늘-겨우미) 사료배 선육관리, 중장기 과수수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행(90억 원) 퇴비화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사·농가 자율방역 관리 강화 민간전문방역업체 등록·관리제도 신설 |

4 살고, 일하고, 실 수 있는 공간으로 농촌 재구조화

| 농촌경제 활성화 | 농촌공간계획 수립 |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강화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 인정 지투리 진흥지역 해제, 농촌재류형 실터 허용 | <p>농촌협약 확대</p> <table border="1"> <tr><th>연도</th><th>476개 '23</th><th>696개 '24</th></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공간계획 기본 방침 마련(4월) 농촌협약 제도 개선 | 연도 | 476개 '23 | 696개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진료 확대·개선, 스마트 교통모델 등 도입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확대(3만 명, 50개 사군) |
| 연도 | 476개 '23 | 696개 '24 | | | |

5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 개 식육 종식 이행 추진 | 연관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강화 | 동물의료체계 개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신고(-5월), 이행계획서(-8월) 제출 기본계획 수립, 사육농가 지원방안 구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제정, One-Welfare Valley 조성('24~'27)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25-'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료 설치 표준화, 신료비 케시발목 확대 전문수의사 및 고급동물병원 체계 도입 |

03

2024년 농촌진흥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과학기술의 융합 · 혁신 · 협업으로 활기찬 농업 · 농촌 -

2024. 2.



농 촌 진 흥 청

순서

| | |
|------------------------------|----|
| I. 추진성과와 평가 | 39 |
| II.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40 |
| III. 2024년 핵심 추진과제 | 41 |
| 1.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 | 41 |
| 2. 농업 분야 공공 R&D 강화 | 44 |
| 3.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 48 |
| 4. 농촌 활력화 및 국제기술 협력 | 51 |
| [참고] 일반현황 | 55 |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로 자급률 향상** 기여
 - (가루쌀) '24년 종자 수요량 확보 및 신품종 육성, 산업화 지원
 - * '24년 종자 673톤(1만ha용) 생산, 수발아 개선품종 육성(전주695), 고추장 등 제품화 지원
 - (작물) 논콩 안정생산기술 개발, 국산품종 육성 등 식량주권 확보 기여
 - *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 보급 확대(콩 수량성 59%↑, 종자 품위 15%↑)
- **발농업 기계화, 그린바이오 융복합 및 현장 중심의 디지털 기반기술 개발**
 - 마늘·양파 재배 전과정 일관 기계화, 비산 저감형 드론 방제기 개발
 - * 마늘 결주율 개선(10%→3), 양파 줄기 절단율 향상(75%→91), 드론 방제(노력 93.5%↓)
 - 농산물 자원화 등 활용기술 지원 및 온실가스 국가고유계수 개발(5종)
 - * 곤충의 기능성 소재화 확대, 라디오파 이용 소고기 연화기술 개발(질긴 정도 20% 개선)
 - 국내 최초 농업 분야 슈퍼컴퓨터 도입 등 디지털 육종기반 마련
 - *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 개소('23.9.): 유전체 분석 기간 단축(46일→11)
-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와 K-농업기술의 세계화**
 - 어려운 기상여건에도 사전예찰·주산지 관리 등으로 성공적 과수화상병 방제
 - * 발생: ('22) 230농가, 101.7ha → ('23) 234, 111.1(전년대비 농가수 102%, 면적 109% 수준)
 - 기후변화 대응 및 여름배추 종합관리기술 개발 등 수급 안정 기여
 - * 과수저온피해 경감(통로온풍법, 피해율 30%↓), 여름배추(수량성 27%↑, 저장기간 50일 연장)
 - K-라이스벨트와 연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추진 및 수출지원
 - * 세네갈 등(6개국)에 벼 종자 생산 기반 조성(426ha 확보), CA 수출 물류비 절감

2 개선 필요사항

-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증가 등에 대응한 피해 저감 및 재해예방 등 **현장 대응력 강화** 필요
- 농업 부문 현안 해결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효율성 제고** 및 **농촌현장 밀착형 신기술 보급체계** 구축

II.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정책 강화, 폭염·저온 등 이상기상의 상시화, 식량안보의 중요성 증대 및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탄소배출 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확충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기준 발표 등 기후변화대응·저탄소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요구 강화
 - *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 로드맵 발표('23.11.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 초거대 AI시대에 ICT·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고, 향후 국가의 AI 활용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
 - * 국가별 AI 산업 수준 : 미국(1위, 100.0점) > 중국(2, 61.5) > 한국(6, 40.3) / 삼일PWC경영연구원
-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R&D 혁신 기술의 중요성 확대
 -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급부상
 - * 글로벌 스마트농업 시장 규모: ('22) 151억\$ → ('27P) 330(연평균 17% 성장)
 -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이 종자 개발, 작물 생육, 수확, 유통 및 소비 등 농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

2 업무 추진 방향

◇ 과학기술의 융합·혁신·협업으로 활기찬 농업·농촌 실현에 역량 집중

| | |
|--|---|
|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업 기계화·자동화■ 병해충·가축질병 대응■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 농업 분야 공공 R&D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루쌀 생산 안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실현 지원■ 친환경·안전 농축산물 생산 |
|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농업 확산■ 바이오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 푸드테크 육성 지원 | 농촌 활력화 및 국제기술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농업 활성화 지원■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지원■ 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 및 수출지원 |

Ⅲ. 2024년 핵심 추진과제

①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

가 농작업 기계화·자동화

- ◇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기계화가 어려운 밭농업기계 중심으로 농작업의 전 과정 기계화 및 자율주행 중심 농업로봇 개발 확대
 - 밭농업기계 신기술 보급: ('23) 17개소 → ('24) 38
- (밭농업기계) 개발 기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마늘, 양파 등 수요가 많은 작물 중심으로 일관 기계화 현장 실증을 확대
 - (마늘) 흙 분리 성능을 개선한 수확기의 현장 실증(3개소)
 - (양파) 기계화에 적합한 공정육묘 시설 확대와 결주율 최소화를 위한 승용형 정식기 성능 보완 실증(3개소)
 - (고추·배추) 보행형(1조식)·승용형(2조식) 정식기 국산화 추진
- (농업로봇) 농업 분야 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연구
 - 과원의 제초·운반·방제 등에 특화된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농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로봇팔 제어 기술 연구 확대
 - * 로봇팔 제어 기술: ('23) 과실 등 형상 인식 → ('24) 수확시기 진단, 좌표 인식
 - 국산 로봇 착유기의 농가 보급을 확대(~'24: 13농가, 14대)하고 착유기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
 - 산업화 지원을 위해 '스마트 온실 로봇'의 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제정 추진(3건: 자율주행, 객체 인식, 수확 성능)
- (사후관리) 농가 사용이 빈번한 농업기계의 내구연한 향상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All in one Care」 서비스 추진(하반기)
 - 주요 농기계(트랙터, 콤팩트, 이앙기)의 단순 고장 수리, 경정비, 관리요령 등에 대한 영상 제공으로 농업인의 실시간·직접 해결을 지원
 - * 농가 보유 농기계에 QR코드를 부착, 인터넷 검색 없이 동영상 정보 바로 연결

나 병해충·가축질병 대응

◇ 기후변화 등으로 야기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방제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방식으로 개선하고 관련 연구·서비스 강화

- 병해충 중앙예찰 대상 확대: ('23) 1종(벼) → ('24) 11(배, 복숭아, 고추 등 추가)

□ (제도개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예찰·방제 체계 전면 개선

- 외래·검역 병해충의 일반문제 병해충으로의 전환기준 정비 및 병해충별 대응 절차와 방제 기본지침 등 제도를 정비

* 식물방역법 개정 추진(예찰방제 대상 병해충 범위, 관리주체 구체화 등): 농식품부에 제안

- 국가-지자체 간 병해충 예찰·방제 역할 재정립과 민관협력기반 마련
 - 중앙예찰단(청)의 예찰 대상을 '벼'에서 '주요 채소와 과수'로 확대하고, 시도·시군별 검역병해충과 문제병해충의 대응체계를 재정립
 - 병해충 예찰조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유기적인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구축

* 예찰조사(시군, 대학 등) → 정밀검사·진단(청, 도기술원, 대학) → 방제지원(청, 지자체 등)

□ (대응연구) 고위험 병해충 대응연구 및 관리 기술 개선

- BL3급 식물 병해충 격리시험 연구시설 완공('24.6. 인증)에 따라 화상병 신규 방제제 약효 실증 등 고위험 병해충 대응연구 본격 추진
- 주산지 중심의 시군별 화상병 위험도 평가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과수 병해충(복숭아탄저병 등)에 대한 기존의 농약 방제 효과 재검토
- 가축의 소모성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기술 개발
 - 소의 피부사상균 예방·치료 방법과 소독제를 개발하고, 염소의 질병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주요 폐사 원인을 구명

□ (서비스)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서비스 확대

- 스마트폰 사진으로 병해충 진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 진단 앱' 보급 및 벼 도열병 자동 예찰장치 개발과 현장 적용 추진

다 |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 ◇ 디지털영상 기반의 작황 분석을 통한 쌀 생산량 예측 및 저장·유통 기술로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 준고랭지 여름배추 생산 ('23) 지역선정 → ('24) 농가단위 검증 및 생산 가능지 선발

□ (예측·생산) 주요 작물의 생산량 예측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

- (쌀) 폭염·저일조 등 이상기상 데이터와 다양한 생육지표,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재배지 탐지 기술¹⁾ 개발 등 예측 시스템 개선
 - 영상과 센싱 기반으로 생육과 수량을 자동 계측하여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벼 디지털 작황 관제시스템' 확대('23: 6개소 → '24: 20)
- (여름배추) 고랭지배추를 대체할 준고랭지의 재배 적지 선정기준과 작형을 개발하고, 고온기 재배기술 실증 등을 통해 안정생산을 지원
 - * (고온피해경감 종합기술) 저온성 필름 피복재배 + 미세살수 + 관수 방법

□ (저장유통) 장기저장 및 신선유통 기술로 농축산물의 안정공급 지원

- 팻릿 단위의 기밀포장 기술을 활용, 마늘·양파 최적 저장모델을 확립하고, 산소농도 제어가 가능한 '능동형 CA 저장기술' 보급을 확대
- 돼지고기 품질관리를 위한 신선도 지표(신선도 지시물질 1종)와 돼지 도체(삼겹살, 목심) 육질 예측을 위한 지표·판정기술 개발

□ (생산비 절감) 시설에너지 비용 절감과 사료비 절감기술 확산

- 축열·축냉조 동시 운용이 가능한 히트펌프 등 온실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계절별 맞춤형 에너지 관리기술 개발
- 수경재배용 양액 재활용, 피복재 활용 기술 등 시설하우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시범보급 추진(26개소: 양액 재활용 16, 피복재 활용 10)
-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조사료(알팔파, IRG)의 대량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료 열풍 건조기 보급을 확대('23: 6대 → '24: 20)
 - * 국산 조사료 종자 생산단지 조성: 알팔파(제주), IRG(김제), 사료피(제주, 천안)

1) 논 관개 유무, 벼 생육에 따라 달라지는 위성영상 값을 AI로 학습시켜 농경지 중에서 벼와 타작물을 구분하여 재배면적을 추정하는 기술

2 농업 분야 공공 R&D 강화

가 가루쌀 생산 안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

- ◇ 가루쌀의 저장·재배 안정성을 향상한 품종육성과 재배 기술 확립 및 밀·콩 신품종 보급, 외래 대체 국산 품종 육성 등 식량자급률 제고
 - 국산밀 생산단지 기술지원: ('23) 72단지(9,961ha) → ('24) 91(11,494)

[가루쌀 생산 안정화]

- (품종·종자) 재배 안정성을 높인 품종육성 및 종자 생산 관리
 - '바로미2' 품종의 수발아(穗發芽) 현상을 개선한 신품종('전주695호')의 지역 적응시험 추진('26년부터 현장보급 예정)
 - * '전주695호': 수발아율 14.9%(바로미2 45.4%), 산패저감 유전자 보유로 저장성 개선
 - 안정적 종자 생산을 위해 원료곡 생산단지 대상으로 현장기술지원단(8개 도기술원)을 운영하는 등 생육단계별 기술컨설팅을 통해 관리
 - * 기술지원단: (청) 교육·긴급 대응, (시·군) 현장 기술지원
- (안정재배) 생산성 향상 및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지역별 수량 격차 해소
 - 수량성 향상을 위해 이양재배·직파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
 - * (이양) 재식밀도, 시비율 효과 / (직파) 파종량과 시기별 안정성 분석
 - 관련 데이터(등숙일수, 강우일수, 강우 시 온도)를 활용, 등숙기 기상예에 따른 '수발아 발생 예측 시스템'(조기경보 기능 탑재)을 개발(상반기)
 - 지역별 맞춤형 재배 매뉴얼 보급 및 안정생산 재배관리 지원
- (산업화) 제품화와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 및 확산
 - 가공특성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쌀가루 품질규격을 설정하고,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루쌀 활용 제품(라면·국수·고추장) 개발을 지원
 - 민간 협의체와 협업을 통한 저장·가공 이용기술 및 정보 확산
 - * 지역별 생산-소비 모델과 연계: ('23) 8개소 →('24) 16(누적)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

□ (밀) 용도별 맞춤형 고품질 품종육성 및 가공이용 연구 강화

- 고단백의 글루텐 조성이 우수한 제빵용 품종과 점탄성이 우수한 면용 품종 등 식미를 개선한 소비자 선호용 품종 육성
- 수매품질등급제 확대에 따라 전국의 밀 생산단지(91개)를 대상으로 품질기준 현장 분석기술을 지원(농관원 협업)
- 국산 밀의 최적 제분·블렌딩 조건과 통밀 품종의 제빵공정 등 제품화를 위한 가공기준을 설정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 (콩) 논 재배에 적합한 품종육성 및 재배 기술의 체계화

- 수량성과 내습성이 향상된 품종을 개발하고(3품종), 조기(5월 중하순)·만기(7월 중하순) 재배 시 병해에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선발(10종)
- 논콩의 침수 피해 방지 기술 현장실증(김제)과 함께 배수 효과가 높은 무굴착 땅속 배수기술 등의 보급을 확대(순창 등 8개소)
- 조사료와 콩의 이모작을 위한 「트리티케일-콩」 재배 현장실증(5개소)

□ (국산품종) 외래품종 대체 및 수요자 맞춤형 품종 확대 보급

- 지자체 브랜드 쌀 품종(외래)의 국산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품종 개발
* (경기 중북부) 고시히카리 → 수원657, (여주) 아끼바레 → 수원674, (부산) 사가 → 밀양387
- 주산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산 씨감자(강원)와 고구마(해남) 신품종의 대량 증식과 보급체계를 구축
- 원예·특용작물 분야는 지자체·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전략작목 중심으로 육종 소재 및 대량 증식 기술을 개발
* 전략작목(40개): 채소(고추 등 9), 과수(사과 등8), 화훼(장미 등 7), 특작(인삼 등 16)

◇ 품목별 신품종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해 도매인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장성 평가와 함께 식미 전문평가단 등 소비자 평가를 병행

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실현 지원

- ◇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2단계 사업 추진('24~'27)으로 기후 변화(이상기상)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개발 기술의 실용화 추진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예측 정확도: ('23) 77% → ('24) 80

□ (기후변화) 이상기상 등 기후환경 변화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용화 연구와 서비스를 강화

- 농업시설과 농기자재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첨단기기 등의 설치 기준을 마련
- 중앙-지방 연계 기상재해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을 확대('23: 75시군 → '24: 110)
- 꿀벌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을 확대('23: 3개소 → '24: 5)하고, 화분 매개 꿀벌 스마트 사육시설을 구축(15개소)

□ (저탄소) 경종·축산 등 농업분야의 탄소배출 저감기술 개발·보급

- 논물관리, 비료 사용 저감 등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 수단을 개발하고, 탄소저감 유전자를 도입한 벼 우량계통 육성(6종)
- 반추가축의 장내 발효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메탄저감 사료 개발과 축산냄새 저감기술의 운영지침 보급
- 탄소감축기술을 패키지화(중간물떼기+완효성비료)한 시범사업 추진(24개소)

□ (미세먼지) 농촌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 관행적인 영농부산물 소각금지를 위한 캠페인성 홍보에서 전국 시군 대상 '마을별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강화
 - 취약계층의 수거·처리 불편 해소,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 저감 등을 위해 민·관 협업방식(산림청, 농협, 농업인단체)으로 추진(139개소)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1~2월)을 통해 농업인 인식개선 홍보·교육 병행

다 | 친환경·안전 농축산물 생산

◇ 분야별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한 농약·비료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기초 연구 확대

- 반려동물 원료사료 영양성분 DB 구축(누계): ('23) 321건 → ('24) 325

□ (친환경) 환경자원으로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기존의 친환경농업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형 재생 유기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작목별(사과, 포도)로 토양과 양분관리 등 핵심 전환 기술 정립
- 가축분뇨의 산업적 이용 확대(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친환경 기술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 고체연료 소각재: 비료공정규격 등록 / 바이오차: 안전성 평가

□ (농약·비료) 신규등록 등 현장 수요 충족 및 안전관리 강화

- 등록농약이 부족한 작물 중심으로 시험과 등록을 추진하고, 꿀벌 위해성 평가체계 개선 및 시험성적 등록정보 데이터 통합관리

* 신규 농약 등록 목표: (시험) 1,235농약 → (등록) 990 (80% 이상)

- 신청 비료에 대한 공정규격 신규 설정, 부산물 활용 비료의 원료 허용기준 마련 등 산업체 등의 애로 해결 지원

□ (동물복지) 농장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기반기술 개발

- 주요 축종별 복지형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2종: 염소, 오리)과 사육 매뉴얼(2종: 산란계, 분만돈)을 보급
- 반려동물 사료산업 활성화 등 정책지원을 위해 원료사료의 영양 성분 DB를 구축하고 영양 관리에 필요한 권장 영양표준을 설정
 - 개와 고양이의 생애주기에 따른 최소 영양 요구량을 제시하고 비만·당뇨·노령견의 건강개선 기능성 사료 소재 발굴 및 활용기술 개발
- 축산물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대응한 가축 생체조직과 유사한 가축 오가노이드²⁾ 활용 동물실험 대체시험법 개발 추진

3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가 스마트농업 확산

- ◇ 시설·노지·축산 등 분야별 핵심기술 실용화 및 데이터 수집·활용과 인력양성을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 스마트팜 기반 확대
 - 농가현장 전주기 데이터 수집: ('23) 405농가(16품목) → ('24) 516(19)

- (핵심기술) 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 모델의 실용화·산업화 촉진
 - 시설 스마트팜 장비 간 통신 표준 설정으로 통합 제어가 가능한 '온실종합관리플랫폼' 기술을 확립하고 민간 이전 추진
 -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노지 농업 생산시스템 확산을 위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24~'26: 9개소) 등 정밀농업 본격 추진
 - 작물 생육정보의 실시간 수집·분석, 농작업 자동화 기술 등 투입
 - * 9개 지자체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운영 업무협약 체결('23.12.)
 - 영상 기반 AI를 활용한 육계체중과 산란계 이상개체 선별기술 개발
- (데이터) 농업 데이터 수집·활용 및 농업기술 전달체계 디지털화 강화
 -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 수집·활용 공간인 '농업 R&D 데이터 플랫폼'을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확대 개방('23: 전북 → '24: 18개 도기술원·센터)
 - 일반 국민에게 청 보유 농업과학기술 데이터 온라인 서비스 실시
 - *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6.21.), 분석·분양 정보 등 10개 분야 서비스(7월)
- (교육기반) 농가 대상 스마트농업 현장 교육 및 디지털 교육시스템 도입
 - 중소규모 농가의 스마트농업 도입을 위해 시군센터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20개소)를 실습장으로 활용,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농업 현장 이슈, 온라인 학습수요 등을 신속히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제공을 위한 '차세대 e-HRD 종합시스템' 구축

2)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여 생체장기와 유사한 구조체를 구현한 것

나 바이오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

◇ 유전자원의 확보·관리와 이용 증대, 디지털 육종 등 생명공학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역량 확보로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지원

- 유전자원 민간분양 확대(누계): ('23) 13,000자원 → ('24) 15,000

□ (유전자원) 농업 유전자원 확보·관리 및 민간활용 확대

-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유전자원 4만점을 중복보존 하고(산림청 협업, 해외 기관에 대해 보존 서비스 제공(아프리카벼연구소 종자 기탁, 6월)
- 보유 자원에 대해 기능성과 병 저항성 등 유용 형질 특성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기업·대학 등과 공유(고추 등 20작목, 5천자원)
- 한우, 돼지 등의 형질 개량을 위한 국가 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개선
* 한우: 평가 형질 추가(35개 → 37) / 돼지: 부모계 평가 형질 통합

□ (디지털 육종)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한 신품종 개발의 효율성 제고

- 농생명 빅데이터 확충과 함께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를 활용한 대규모 유전체, 표현체 데이터의 고속 분석 등 디지털 육종 역량 강화
- 작물의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벼(수량), 콩(크기, 기능성)의 특성을 강화한 디지털육종모델 개발
- 슈퍼컴퓨팅 활용 기술을 육종기업 등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 추진

□ (미생물) 유용한 농업 미생물의 발굴과 실용화 촉진

- 잔류농약 분해 미생물의 효과 검증 및 병해충 방제 미생물 개발과 오이·콩·수박 등의 전체 생육기에 대한 처리법 정립 등 실용화 추진
- 발효 미생물자원의 발굴과 특성 평가 및 실용화를 위한 발효 종균의 제형화 기술을 개발하고, 토착 발효 미생물의 종합정보망을 구축
* 생물자원등록(누계): ('23) 175주 → ('24) 195 / 종균화: ('23) 33 → ('24) 34

다 푸드테크 육성 지원

◇ 농산물, 농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업사이클링, 기능성 소재화 기술 개발·보급 등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 강화

○ 국가표준식품성분 DB(데이터 누계): ('23) 26만건 → ('24) 28

□ (업사이클링)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 농산부산물의 순환 자원화 강화

○ 사과, 감귤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식이섬유, 축산악취 저감제, 친환경 비료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기능 성분 추출 및 자원화 기술을 개발

* 제품화 분야: 배착즙박(화장품), 굴피(대장염), 생강잎(항비만), 감귤박(멸칭자재)

○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산업화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과학적 근거 지원

□ (기능성소재) 농산물, 약용작물, 곤충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고 상품화 기술을 개발

○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원료·소재 DB 확대('23: 3,200건 → '24: 3,600)

○ 근육 감소 예방, 심혈관 질환 개선 등 기능성 소재 발굴

* (땅콩, 천마) 근육 감소 억제, (참당귀, 흑삼, 벌화분) 전립선 건강

○ 두류(완두), 버섯(느타리·동충하초), 곤충 등을 이용한 대체육 등 대체 식품 상품화를 위한 원료 특성 연구

□ (식품성분) 국내 농산물 영양·기능 성분 DB 확대와 산업적 활용 촉진

○ 국가표준식품성분 DB를 확대 축적(28만건)하여 일반에 공개(4월) 하고 아시아 12개국에 참여하는 아시아식품성분 DB를 구축(6월)

○ 고령자의 저작단계(음식물 씹는 능력)에 따른 채소 종류별 제공 방법 등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소비정보를 구축하여 제공

4 농촌 활력화 및 국제기술 협력

가 지역농업 활성화 지원

-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작목 육성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 농촌의 자생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청년 농업인 품목별 모임체 운영: ('23) 313개소 → ('24) 350

- (지역특화작목) 지역과의 맞춤형 협업을 통해 대표작목을 육성
 - 청은 도별 대표작목(1개)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집중육성작목 연구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개편
 - * 지역특화작목 육성체계 개편: ('23) 집중 36작목 → ('24) 대표 9, 집중 18
 - 「도 기술원-시군센터-대학-산업체-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 협업체제로 대표작목 육성을 지원
 - * 연구(청-도기술원), 보급(청-도기술원-시군센터), 성과확산(대학-생산자단체-산업체)
- (지역자생력) 지역 주도의 기술개발·보급체계 확립 등 자생력을 제고
 -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사업, 지역 대학을 활용한 신기술 보급 등 민·관 협력사업 확대
 - * 기술보급 블렌딩: '연구-지도-민간기술'을 융복합한 협업모델(10개소)
 - * 산학협력: 개발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해 지역대학의 시설·시험포장을 활용(18과제)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과 기술 연수프로그램을 운영
 - * 연수프로그램: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대상 경력단계별·전문직무 분야별 교육
- (청년농업인) 기술교육과 컨설팅 중심으로 정착 초기의 지원역할 강화
 - 영농 정착 대상자에 대한 기초기술교육(2천명)과 사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청년 맞춤 정보서비스인 '뚝뚝청년농부'의 콘텐츠 보강
 - 신기술 시범사업에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확대(41종, 83개소)하고, 생산물 상품화와 판매에 대한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 * MD 전문 코칭 교육(40명), 라이브커머스 교육(40명), 제품 품평회 지원(9월)

나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지원

◇ 가치 있는 공간으로서 농촌의 재생과 농업인 안전,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관련 정책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지원

- 농촌 생활공간 데이터 구축(누계): ('23) 65종 → ('24) 80

□ (농촌공간)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농촌 재생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촌 생활공간 데이터 구축

- 보건·의료·문화·교육 등 농촌 지역별 생활공간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서비스체계 구축

* 생활 서비스, 환경, 교통망, 바람길 등의 데이터 구축 및 정보서비스(12월)

- 시군 단위 관계 인구³⁾ 분석 및 경관농업과 농업유산 등 농촌 특화 지구의 기준 설정을 지원

□ (농작업안전) 농업인 대상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안전실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재해 예방관리체계 구축

- '안전 리더' 양성, 이론·실습 등 농업인 직접 참여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139개소), 교육 이수자에 대해 안전재해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 추진

-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12천농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 지침서를 보급 및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등 실천 문화 확산

□ (치유농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치유농업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시험방식 정비 등 치유농업사 자격제도를 개선

* 우수 치유농업시설 필수 인증기준(4요소): 경영, 인적자원, 프로그램, 시설환경

- 복지부, 여가부의 사회서비스와 연계하는 치유농업 확산모델 육성(10개소)

* 연계 사회서비스: 방과 후 학습, 학교 밖 청소년, 발달 재활, 아동 통합지원 등

3)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 개념으로 특정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진 않으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인구를 의미

다 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 및 수출지원

- ◇ K-농업기술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혁신 기술 적용으로 농식품 수출 증대를 지원
 - CA 컨테이너 적용 수출 최적조건 설정: ('23) 16품목 → ('24) 25

□ (농업기술 ODA) K-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확대

- K-라이스벨트 사업(농식품부)과 연계하여 '아프리카 적용 다수확 벼 우량종자 생산사업'(RiceSPIA) 확대(세네갈, 가나 등 7개국 대상)
 - * 종자 생산 목표: ('23, 6개국) 2,040톤/300ha → ('24, 7개국) 3,288/412
- 개도국 대상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신규센터 설치(카메룬) 및 지역별 거점 센터 구축(세네갈 등 3국) 등 사업 대상국을 확대

□ (R&D 국제협력) 생명공학 등 미래대응 분야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 글로벌시장 진출용 생명공학 종자·소재 사업화를 위한 한·우루과이 협력연구실 운영 및 국제 공동연구 추진(우루과이 현지 협력연구실 개소, 5월)
- 기후변화, 유전자원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 국제기구·기관과의 다자 협력과 함께, 중진국과의 농업기술 협력체계 구축

□ (수출농업) 농업과 전후방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수출지원 확대

-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을 위해 수출 유망단지를 대상(딸기, 포도, 복숭아 등 5개소)으로 품질관리와 상품화 기술을 지원
- 선박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장기간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CA 컨테이너 적용을 통해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를 추진
 - * 파프리카: (기존) 일본 → (확대) 홍콩,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등
- KOPIA 등 국제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농업기술과 농기자재를 패키지화한 수출모델 발굴 등 기술수출 활성화
 - * 낙농 전후방산업 패키지 수출(우즈벡): 유전자원+사양·번식기술+축산기자재

04

2024년 농촌진흥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농업·농촌 현장 문제,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 (정책 확장)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 식량자급률 제고 등 농업 분야 공공 연구개발(R&D) 강화
- (미래 혁신) 스마트농업 확산과 바이오 융복합 혁신 기술 개발로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 (현장 접점) 지역농업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지원 및 케이(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
- (추진 기반) 융복합 협업 활성화,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혁신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학기술의 융합·혁신·협업으로 활기찬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실현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인구 감소·고령화 등에 따른 농산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 등 우리 농업·농촌이 마주한 여건이 녹록지 않다. 반면,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급부상 등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농촌진흥청은 국정·농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과학기술의 융합·혁신·협업을 통한 활기찬 농업·농촌 실현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①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 ② 농업 분야 공공 R&D 강화 ③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④ 농촌 활력화 및 국제기술 협력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융복합 협업 활성화와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

업무계획 주요 내용

1]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

가. 농작업 기계화·자동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가 미흡한 밭 농업을 중심으로 농작업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자율주행 농업로봇 개발을 확대한다.

① 마늘, 양파 등 수요가 많은 작물 중심으로 일관 기계화 현장 실증 확대

- 마늘 수확기(3개소), 양파 정식기(3개소) 성능 개선을 위한 현장 실증을 확대하고, 고추·배추 정식기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② 농업 분야 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 과수원에 특화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를 지원하고, 로봇팔 제어 기술 연구 및 국산 로봇 착유기의 농가보급을 확대한다.(~'24: 13농가, 14대)

나. 병해충·가축 질병 대응

기후변화 등으로 야기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방제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방식으로 개선하고 관련 연구와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예찰·방제 체계 전면 개선

- 중앙예찰단의 예찰 대상을 벼 한 작물에서 주요 채소와 과수로 확대한다.
 - * 병해충 중앙예찰 대상 확대: ('23) 1종(벼) → ('24) 11(배, 복숭아, 고추 등 추가)
- 예찰 조사, 정밀검사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민관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 예찰 조사(시군, 대학 등) → 정밀검사진단(청, 도기술원, 대학) → 방제 지원(청, 지자체 등)

② 고위험 병해충 대응연구 및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서비스 확대

- 생물안전 등급(Biosafety Level) 3등급 식물 병해충 격리 시험 연구시설 완공('24.6. 인증)에 따라 고위험 병해충 대응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스마트폰 사진으로 병해충 진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병해충 영상진단 앱을 보급한다.

다.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디지털영상 기반 작황 분석을 통한 쌀 생산량 예측 및 저장·유통 기술로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① 주요 작물의 생산량 예측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 생육과 수량을 자동 계측하여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영상과 센싱 기반의 '벼 디지털 작황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 ('23) 6개소→('24) 20→('27) 100 / 사업 기간: '24~'27(4년) / 총사업비: 75억 원('24년 15억 원)
- 팻릿 단위 기밀 포장 기술을 활용하여 **마늘·양파** 최적 저장모형을 확립하고, 산소농도 제어가 가능한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 보급을 확대한다.

② 시설 에너지 비용 절감과 사료비 절감 기술 확산

- 시설하우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시범 보급을 추진(26개소)하고,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조사료의 대량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 국산 조사료 종자 생산단지 조성: 알팔파(제주), IRG(김제), 사료피(제주, 천안)

2 농업 분야 공공 연구개발(R&D) 강화

가. 가루쌀 생산 안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

저장·재배 안정성이 향상된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용도별 맞춤형 고품질 밀 품종 및 논 재배에 적합한 콩 품종을 육성한다.

① 재배 안정성을 높인 가루쌀 품종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

- '바로미2' 품종의 **수발아(穗發芽: 이삭에 싹이 트는 것) 현상을 개선한 「전주695호」**의 지역 적응 시험을 추진하고, 조기경보 기능을 탑재한 '수발아 발생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 「전주695호」: 수발아율 14.9%(「바로미2」 45.4%), 산패저감 유전자 보유로 저장성 개선
-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루쌀 활용 제품(라면·국수·고추장)** 개발을 지원하고, **민간 협의체와 협업***하여 저장·가공 이용 기술 및 정보를 확산한다.
* 지역별 생산-소비 모델과 연계: ('23) 8개소 → ('24) 16(누적)

②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

- 제빵용, 면용 등 식미를 개선한 소비자 선호용 국산 밀 품종을 육성하고, 수량성과 내습성을 향상한 논 재배에 적합한 콩 품종을 개발한다.

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실현 지원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2단계 사업 추진('24~'27)으로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개발 기술의 실용화를 추진한다.

①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용화 연구 및 서비스 강화

- 중앙-지방과 연계한 기상재해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23: 75시군 → '24: 110)
- 꿀벌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을 확대 구축한다. 또한 우수 꿀벌 품종 증식을 위해 9개 지역에 전문 농가를 육성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사육모델을 15개 지역 250여 농가에 보급한다.
* 꿀벌 증식장: ('23) 3개 지역(전남 영광, 경남 통영, 충남 보령) → ('24) 5개 지역(전북 군산, 전남 진도 추가)

② 농촌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

- 영농부산물 소각금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마을별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사업 규모: 139개소 5,844백 만 원(개소당 105백 만 원, 국비 40%)

다. 친환경·안전 농축산물 생산

분야별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한 농약·비료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연구를 확대한다.

① 환경자원으로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산업적 이용을 확대한다.
* 고체연료 소각재: 비료공정규격 등록 / 바이오차: 안전성 평가

② 농약·비료의 신규등록 등 현장 수요 충족 및 안전관리 강화

- 등록 농약이 부족한 작물에 대한 시험과 등록을 확대하고, 비료의 공정 규격 신규 설정과 부산물 활용 비료의 원료 허용 기준을 마련한다.

* 신규 농약 등록 목표: (시험) 1,235농약 → (등록) 990 (80% 이상)

③ 농장 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기반 기술 개발

-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을 위해 원료사료의 영양성분 DB를 구축하고, 가축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 개발을 추진한다.

* 반려동물 원료사료 영양성분 DB 구축(누계): ('23) 321건 → ('24) 325

③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가. 스마트농업 확산

시설·노지·축산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실용화하고, 정보(데이터) 수집·활용과 인력양성을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반을 확대한다.

① 정보(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모델의 실용화와 산업화 촉진

- 주산 작목 중심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2026년까지 9개소를 조성한다. 올해에는 정보(데이터) 수집 등 기반을 갖추고, 향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로봇 기술과 예측·분석 기술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② 농업 데이터 수집·활용 및 농업기술 전달체계 디지털화 강화

- '농업 연구개발(R&D) 정보(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확대한다.

* ('23) 1개소(전북 시범) → ('24) 18(도기술원·센터) → ('25) 30

-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여 농산물 안전, 가축분뇨 등의 분석자료와 농산물종합가공 등 정보를 제공한다.

*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6.21.), 분석 정보 등 10개 분야 서비스(7월)

③ 농가 대상 스마트농업 현장 교육 및 디지털 교육시스템 도입

- 시군센터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20개소)를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제공을 위한 '차세대 e-HRD 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

나. 바이오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

유전자원의 확보·관리와 이용 증대, 디지털 육종 등 생명공학 핵심 분야 연구 역량을 확보하여 친환경 생명공학(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① 농업 유전자원 확보·관리 및 민간 활용 확대

-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유전자원 4만점을 중복보존한다. (산림청 협업)
- 보유 자원에 대해 유용 형질(기능성, 병 저항성 등) 특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업·대학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고추 등 20작목, 5천 자원)

② 디지털 육종 등을 활용한 신품종 개발의 효율성 제고

- 농생명 빅데이터를 확충하고 「농생명슈퍼컴퓨팅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육종 역량을 향상한다. 작물의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수량, 크기, 기능성 등의 특성을 강화한 디지털육종모델을 개발하고, 슈퍼컴퓨팅 활용 기술을 육종기업 등에 확산한다.

다.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육성 지원

농산물, 농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업사이클링)과 기능성 소재화 기술 개발·보급 등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①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한 농산부산물의 순환 자원화 강화

- 농산부산물을 활용하여 축산냄새 저감제 등에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재활용(업사이클링)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 제품화 분야: 배착즙박(화장품), 굴피(대장염), 생강잎(항비만), 감귤박(멸칭자재)

②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상품화 기술 개발

-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원료·소재 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하고('23: 3,200건 →'24: 3,600), 근육감소 예방, 심혈관 질환 등을 개선하는 기능성 소재를 발굴한다.

④ 농촌 활력화 및 국제기술 협력

가. 지역농업 활성화 지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작목 육성과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 농촌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① 지역과의 맞춤형 협업을 통한 대표작목 육성

- 청은 도별 대표작목 1개를 중점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집중 육성작목 연구를 주관한다.

* 지역특화작목 육성 체계 개편: ('23) 집중 36작목 → ('24) 대표 9, 집중 18

② 지역 주도의 기술 개발·보급체계 확립 등 자생력 제고

- 연구-지도-민간 기술을 결합하여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사업'(10개소)을 추진하고,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기술교육과 전문 상담(컨설팅) 중심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초기 지원 역할 강화

- 농식품부에서 선발·지원하는 영농 정착 대상자 2천 명에게 기초기술교육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 신기술 시범사업에 청년농업인 참여를 확대(41종, 83개소)하고, 판촉(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 엠디(MD) 전문 지도(코칭) 교육(40명),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교육(40명), 제품 품평회 지원(9월)

나.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지원

가치 있는 공간으로서의 농촌 재생과 농업인 안전,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관련 정책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① 농촌 재생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촌 생활공간 자료(데이터) 구축

- 생활 서비스, 교통망 등 자료(데이터)를 구축하고 **12월부터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자율적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

- ‘안전 리더’ 양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농업인 참여형’ 농작업 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③ 제도개선을 통한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과 유관 기관 연계 강화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제도도 개선한다. 2차 시험방식을 간소화하고, 1급 치유농업사 응시 자격은 기존 2급 경력 조건을 완화(5년→3년)한다.

* 우수 치유농업 시설 필수 인증 기준(4요소): 경영, 인적자원, 프로그램, 시설 환경

다. 케이(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 및 수출지원

한국 농업기술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농식품 수출 증대를 지원한다.

① 케이(K)-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확대

- 농식품부의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라이스피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종자 생산: (’23) 2,040톤/300ha → (’24) 3,288/412 → (’27) 11,140/986

② 미래 대응 분야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 해외시장 진출용 고부가 종자·소재 사업화를 위해 한·우루과이 협력연구실을 현지에 운영할 계획이다. (우루과이, 5월 개소)

③ 농업과 전후방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수출지원 확대

- 고급(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유망단지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와 상품화 기술을 지원한다. (딸기, 포도, 복숭아 등 5개소)

연구개발 혁신 추진 (업무추진 기반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융복합 협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관리제도 개선 및 전문연구실 개편 등 연구개발(R&D)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①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 현안 해결을 위한 중형무진 프로젝트(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등 8개)를 추진하고 협업·소통 오픈랩 마련 등 협업문화를 조성한다.

* 예산 확대: ('23) 223억 → ('24) 233 / 협업·소통 공간 오픈랩(2개소) 운영

② 연구개발(R&D) 효율성·혁신성 제고

-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과제 최소화, 융복합 규모화 등 기관 고유 과제를 재편하고, 혁신적·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실패 용인, 정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③ 국가 임무 중심 전문연구실 체계 개편

- 국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연구실을 통합·규모화하여 세계적(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난제 해결을 위한 협업을 촉진한다.

* 연구실 수: (기존) 231개실 → (개편) 164 / 실별 인력: (기존) 4.1명 → 개편 6.2

마무리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우리 농업·농촌이 마주한 어려운 문제 해결에 민관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며 “농촌진흥청 전 직원은 올해 **농업과학기술 혁신**에 주력하고, 유관 부처·산업체·대학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 및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농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실 | 책임자 | 과 장 | 선준규 (063-238-0410) |
| | 기획재정담당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박창욱 (063-238-0411) |

과학기술의 융합·혁신·협업으로 활기찬 농업·농촌

1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

| | | |
|---|---|---|
| <p>농작업 기계화·자동화</p> <p>17개소 → 38개소 '23 '24</p> <p>발농업기계 신기술 보급 확대</p> <p>과수원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 지원</p> | <p>병해충·가축질병 대응</p> <p>사후대응 → 사전예방</p> <p>11종 (배, 복숭아, 고추 등) 1종(벼) → 23 '24</p> <p>중양예찰단 예찰 대상 확대</p> | <p>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p> <p>6개소 → 20개소 '23 '24</p> <p>벼 디지털 작황 관제시스템 확대</p> <p>4개 지역</p> <p>국산 조사료 종자 생산단지 조성</p> |
|---|---|---|

2 농업 분야 공공 R&D 강화

| | | |
|---|--|--|
| <p>식량자급률 제고</p> <p> 수발아율 </p> <p>전주695호 14.9%</p> <p>바로미2 45.4%</p> <p>가루쌀 수발아 개선 '전주695호' 육성</p> <p>5개소</p> <p>조사료-콩 이모작 재배 현장 실증</p> | <p>저탄소·기후변화 대응</p> <p>3개소 → 5개소 '23 '24</p> <p>꿀벌 증식장 확대</p> <p>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신규 추진</p> | <p>친환경·안전 농축산물 생산</p> <p>고체연료 바이오차</p> <p>영양성분 DB (325건)</p> <p>가축분뇨의 산업적 이용 확대</p> <p>반려동물 원료사료 DB 구축, 영양표준 설정</p> |
|---|--|--|

3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 | | |
|--|--|--|
| <p>스마트농업 확산</p> <p>9개소 → 10분야</p> <p>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p> <p>농업과학기술데이터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개시</p> | <p>바이오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p> <p>13천 자원 → 15천 자원 '23 '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원 민간분양 확대 · 유전자원 4만점 중복보존 신원리 합인 | <p>푸드테크 육성 지원</p> <p>3,200건 → 3,600건 '23 '24</p> <p>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산업화 현장 애로해소</p> <p>국산 농산물 기능성 원료·소재 DB 확대</p> |
|--|--|--|

4 농촌 활력화 및 국제기술 협력

| | | |
|--|---|---|
| <p>지역농업 활성화 지원</p> <p>집중 36작목 → 대표 9작목 집중 18작목 '23 '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작목 육성체계 개편 · 도별 대표작목 1개 중점 지원 대표 9작목 | <p>래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지원</p> <p>농업인 재해예방 교육</p> <p>농업인 직접 참여형 재해예방 교육</p> <p>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p> | <p>K-농업기술 확산 및 수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버 우량종자 생산사업 확대 7개국 ·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단지 육성 5개소 |
|--|---|---|

05

2024년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2024. 2.

순 서

| | |
|---|----|
| I. 추진성과와 평가 | 73 |
| II.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75 |
| III. 2024년 산림청 핵심 추진과제 | 77 |
| ① 일상화,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 77 |
| ② 임업인의 소득을 제고하고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 79 |
| ③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 | 81 |
|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와 첨단 연구·개발 강화 | 83 |
| ⑤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85 |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 (산림자원) 국토녹화 성과를 바탕으로 숲을 임업인들의 소득원이자 지역발전 자산으로 육성
 - 국토녹화 50년간의 성과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산림100년 비전' 선포('23.4),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23.9) 및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23.11)
 - 산주(220만명),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규제개선(112건) 및 임업직불금 지급을 확대(8.1%)하고 '숲경영체험림'('23.6) 등 제도 확충
 -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981만명 방문), '강원세계산림엑스포'(145만명 방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
- (산림재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강화(산불피해: ('22)24,797ha →('23)4,992ha)
 - 영농부산물 소각차단 등 산불원인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림과 주변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산사태 시스템으로 시범통합·관리('23.6)하여 피해 저감*
 - * 산림, 급경사지, 도로변의 붕괴상황을 국토부, 행안부와 신속 공유하여 산사태 등 추가피해 예방
- (기후위기) 저탄소사회 실현과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
 - 범부처 협력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3.4) 내 산림부문 목표를 반영(11%)하고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제정('23.8) 등 이행 기반 강화

- 탄소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로 목재친화도시 등의 조성을 활성화 하고 '생물다양성협약'(GBF) 이행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약 7천ha) 및 취약식물 관리 확대
- 캐나다에 산불진화대원(70명)을 최초 파견하여 산불진화 지원(261ha)

2 개선 필요사항 및 방향

□ 극한기후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근본적 개혁 필요

⇒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23.12, 관계부처 합동 수립) 이행 등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등 법적기반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을 산림 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확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확충 등 반영

□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 산지이용체계 강화 필요

⇒ 보전가치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국민경제활동 등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재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활용으로 산림의 편익 극대화

II.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산림재난) '24년은 기후여건상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빈발***하기 쉽고 산림에 인접한 생활권의 **대형피해**로 이어지는 **복합재난**으로 악화할 우려
 - * 올봄은 평년보다 고온건조하고 여름에는 극한호우가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23, 기상청 등)⇒ 산림재난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을 강화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제로화**

- (민생) 우리 숲은 매년 **420조원의 가치***와 **6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82%**가 찾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환경·사회자산으로 부상
 - * 연간 산림산업매출액 161조원 및 경관·수원함양·탄소흡수 등 공익가치 259조원 창출('23)⇒ 청년지원, 일자리창출 등 **민생과 밀접한 규제·제도**를 개선하여 **산림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 (저탄소) '지구 열대화'에 대응하여 탄소통조림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보호**가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확산
 - * 건설부문에서의 탄소감축을 위해 목조건축 촉진 추진('23, EU 산림전략 2030)⇒ 국산목재를 가치있게 활용하는 **목재산업**을 육성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이끌고 **OECD(준보호지역) 도입** 등 **산림생태계의 관리 강화**

- (디지털) 유럽연합(EU), 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는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림·임업의 디지털화** 촉진
 - * (EU, '23) 산불 등 산림재난에 인공위성 활용 (독일, '21) 「숲 전략 2050」에 산림의 디지털화 촉진 반영⇒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우리 산림을 **디지털, 스마트, 빅데이터**로 **첨단화**하여 **산림재난 대응 등의 과학화 확대**

- (국제협력) 국제사회는 **산불, 기후위기** 등 국경을 초월한 **신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 선도국가인 우리나라에 역할 확대*** 요구
 - * 캐나다, 호주 등은 산불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와 공조체계 구축('23, UNFCCC COP28)⇒ 우리의 **선진 산림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하는 **산림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산림 현안 논의**를 선도하는 **녹색 중추국가**로 발돋움

2 2024년 산림청 업무추진 개요

비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

목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

- 산불·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 임업인 소득증진
- ('23잠정) 3,827만원→('24) 4,000만원
- 산림복지 이용인구
- ('23) 2,536만명→('24) 2,711만명

5대 전략

12대 세부과제

1. 일상화,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 빈틈없는 산불 대응체계 구축
- 극한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병해충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

2. 임업인의 소득을 제고하고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정책지원 확대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 확대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

-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여 녹색성장 견인
- 저탄소사회 실현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산림역할 강화

4. 산림경영의 디지털화와 첨단 연구·개발 강화

- 산림경영의 디지털 전환 촉진
-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산림을 첨단산업으로 전환
- 산림생명자원을 바이오경제 핵심으로 육성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국가 외교 전략에 부응하는 한국형 산림협력 모델 확산
- 산림 분야 탄소국외감축사업 본격화 및 해외산림자원 공급망 강화

Ⅲ. 2024년 산림청 핵심 추진과제

1 일상화,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 ◇ 첨단기술 활용과 과학적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인명피해 제로화
-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저감 : ('23) 107만그루 → ('24) 87만그루(△19%)

[빈틈없는 산불 대응체계 구축]

- (예방) 산불원인별 범부처 협력 및 과학적 예방을 강화하여 대형산불 원천 차단
 - 영농부산물 파쇄, 화목보일러 점검 등 산불 원인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농식품부, 환경부 등 협업)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는 엄단*
*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 상한선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산림재난방지법」 제정 등)
 - 산불예방숲가꾸기(26.8천ha)와 산림 내 목재부산물 수집(12.5천ha)으로 산불 연료를 제거하고, 전력선 주변 등 산불위험목 정리를 위한 협업(산업부 등) 강화
 - 인공지능으로 산불징후를 24시간 감지하는 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타부처 CCTV, 산악기상관측망(480개소) 등을 활용하여 산불을 빈틈없이 감시
*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진화) 신속한 범부처 신고체계와 공중·지상 입체대응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 산불 신고를 '긴급신고통합시스템(112, 119)'에 연계하여 신속한 출동 태세를 구축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산불대응단계* 정비(1월)
* 기존 4단계를 3단계로 통합하고 발령 기준에 주택 등 시설물 피해 추가
 - 악천후 및 야간 상황에서의 진화효율 제고를 위한 산불진화임도* (409km), 해외임차헬기(대형5, 중형2), 국산 산불진화헬기(2대) 등 확충
* '23.3월 발생 합천(임도 존재) 산불의 야간진화효율은 하동(임도 부존재)의 5배
- (기반) 일상화, 대형화 산불에 대비하여 법·제도 및 대응역량 강화
 - 산림재난에 특화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재난총괄 기능 보장 및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23~'26), 산림재난교육훈련센터 등 구축 추진
 - '산불재난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을 강화하여 산불 진화부터 피해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대응 시스템 확립

[**극한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 (예방) '산사태취약지역' 실효성 확보 등으로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 현재 산림에만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경지 등 산림 외 지역으로 확대(「산림보호법」 개정)
 - 인위적 개발지, 산림재난 피해지 등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을 조사하여 (23: 2.5만개소 → '24: 4.5만개소) 취약지역을 확대하고 예방사업 집중
 -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택설치, 산지개발 등은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안전 요건 강화(「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0월)
 - 민가 주변의 임도 등 산림시설은 산사태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산불피해목은 신속히 정리*하여 산사태로 인한 추가피해 예방
 - * (기존) 긴급벌채 시 산주동의 필요 → (개선) 30일 공고로 같음(「산림자원법」 개정, '23.12 시행)
- (대응) 예보시스템 고도화와 신속한 대피체계 구축으로 주민안전 확보
 - 부처별로 관리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의 붕괴위험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산림계곡 정보를 반영하여 산사태 예측력 제고
 -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산사태 예보를 고도화하고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대피시간 확보(1시간)
 - '산사태 위험지도'의 정밀도면화와 실시간 강우량 반영으로('24.上) 대피지역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지자체장 등에 신속 통보
 - 산사태 피해지는 드론, LiDAR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복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병해충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

- (소나무재선충병) 빈틈없는 예찰과 철저한 방제로 피해 최소화
 - 헬기(집단·누락지파악), 드론(비가시권), 지상(근거리)의 3중예찰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집단발생지는 복합방제(모두베기·축아베기+나무주사)로 재발 차단
 - 책임방제구역 지정과 평가제도로 부실 방제를 방지하고, 방제명령 대상 확대(소유자 → 관리자) 및 실효성 있는 제재로 방제효과 제고
- (돌발·외래병해충) 조기발견 및 신속방제로 생활권 피해 최소화
 - 농진청, 검역본부 등과 해외유입 차단, 예찰·방제를 위한 협업 강화

② 임업인의 소득을 제고하고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 ◇ 임업인 지원으로 소득증진 기여 : ('23잠정) 3,827만원 → ('24) 4,000만원(+5%)
- ◇ 생활권 산림복지 강화로 이용인구 확대 : ('23) 2,536만명 → ('24) 2,711만명(+175만명)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정책지원 확대]

- (임산물) 인프라 현대화와 소비촉진으로 시장규모 확대('21: 4.3조원 → '24: 5조원)
 - 생산·가공·유통기반 개선(39개소), 의무자조금 확대 등으로 청정임산물 공급을 늘리고, 석재산업을 자연 친화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임산물 수출 증진('23: \$4.1억→'24: \$5억)을 위해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동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물가안정 도모
- (경영지원) 산지이용 합리화, 규제개선 등으로 임업인의 소득과 권익증진
 -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적으로 보전하되, 국민 편익 증진과 임업인 산림경영,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이용 확대*
 - * 단,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규제 개선 추진
 - 산림경영 활성화와 임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법령 등 개선
 - (규제) 국민·임업인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기 발굴과제는 신속히 정비하여 현장 안착('22~'23: 309건 발굴, 195건 정비)
 - (세제)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기 발의('23)된 세법안*의 통과를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 지속
 -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법령) 사유림경영 촉진을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개편
 - 청년층의 산림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기(입문→성장→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등 신규일자리 발굴 확대
 - * 산림청기업 협업으로 '식물생활가전' 등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신산업화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등 활성화
- (경영안정) 직불금 확대, 재해피해복구 지원강화 등으로 임업경영 안정화
 - 임업직불금 수혜 확대를 위해 지급금액 증액('23예산: 468억원 → '24예산: 544억원) 및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선택형직불제 도입 검토
 - * 주업기준(하한) 면적 3ha→1ha, 판매액 1,600만원→900만원 등(「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 '24.上)
 - 임산물재해보험 품목을 추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 등 피해복구 지원 강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 확대**]

- (휴양·치유) 국민건강·힐링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확대('23: 1,136개소→'24: 1,202개소)
 - 국민의 정서안정 효과가 높은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림치유·휴양 등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 활성화
 - 산림치유의 산업화를 뒷받침할 「산림치유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10월 준공) 등 체류형 산림치유 기반 확충
 - * 산림치유자원 관리, 산림치유산업 육성, 국가건강정책과의 연계 등 규정
 - 건전한 등산·산림레포츠 확산을 위해 등산학교(서부권), 산림레포츠센터(밀양)를 확충하고 산악안전* 민·관 협력체계 구축(대한산악구조협회 등)
 - * 등산사고 현황 : ('20) 8,454건 → ('21) 6,496건 → ('22) 9,352건
 -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동서트레일' 등 산림복지 자산이 생활인구 유입 등 산촌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의 협력 강화
 - * 인제 자작나무숲은 '17년 산촌활성화 사업 이후 연평균('18~'22) 방문객 30만명, 경제적효과 336억원 발생 추정
- (생활환경) 미세먼지, 도시열섬 완화에 탁월한 도시숲(214개소), 정원(114개소) 등 조성
 - 도심 유휴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협업(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강화하고 학교운동장 개선, 벽면녹화 등 도시숲 인프라 다변화
 - 가로수가 체계적으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차별 계획 수립, 진단조사·심의 강화*(7월)로 잘못된 가지치기 관행 근절
 - * 가지치기 시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성·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강화(「도시숲법」 개정)
 - 생활 속 정원 확산을 위해 옥상 등에 적용가능한 모델정원을 개발·보급(3모델)하고 정원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정원도시' 제도 도입 추진(「수목원정원법」 개정)
 - 한국정원의 세계화를 위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조사, 울산·세종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한국정원 관리체계 마련
- (산림문화) 우리 숲에 문화와 예술을 입혀 품격높은 공간으로 창출
 - 산림문화자산(96개소)에 예술, 인문학 등을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무형자산(지역놀이 등) 발굴 확대로 산림문화 지평 확장
 - 숲에서 영화, 공연 등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 확대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

- ◇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저장된 탄소량 : ('21) 67만톤 → ('24) 90만톤(+34%)
- ◇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증량 : ('23) 4.7만tCO₂ → ('24) 9.5만tCO₂(+101%)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여 녹색성장 견인]

- (산림자원) 기후변화 적응력과 부가가치 높은 산림자원 육성(1.7만ha)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활엽수 등으로 조림수종을 다양화하고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양묘장을 조성하여 우량 묘목생산 확대
 - 체계적 숲가꾸기(20만ha)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동을 인증하는 '한국산림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산림의 경제·사회·환경가치 증진
- (산림경영) 조림-수확-이용의 가치사슬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강화하여 목재자급률 향상('22: 15% → '27: 25%)
 -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인프라 투자 확대
* 임도신설물량(임도밀도) : ('23) 1,029km(3.97m/ha) → ('24) 1,111km(4.11m/ha)
주요선진국 임도밀도 : 독일 54.0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3.5m/ha
 -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에 산주 역할을 강화*하고 목재 등 산림자원을 지역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선순환 모델을 확산하여 산림경영 활성화
* (기존) 대리경영, 경영전문가 운영 → (개선) 산주와 경영전문가 협업경영
 - 산림사업 실태를 상시 점검하여 품질을 높이고 산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5월)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 조성
- (목재산업) 국산목재를 가치있게 쓰는 목재산업 육성('20매출: 48조원 → '25: 60조원)
 - 탄소감축효과*가 높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국토부 등 공동) 목재친화도시 등 조성 확대('23까지: 16개소 → '24까지: 23개소)
* 목조건축 1동(100m)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 '목재이용=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해 탄소저장량 표시를 확대*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 수집, 부적합 원료 사용 등 단속 강화('24.上)
* (기존) 합판 등 15개 목재제품 → (개선) 국산재를 이용하는 전체 목재제품(연료용 제외)
 - 지역의 목재를 활용하는 '목재산업단지'(화순), 산림·목재클러스터(강원)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목재산업의 현대화·규모화 촉진

[**저탄소사회 실현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산림역할 강화**]

- (저탄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9억톤)의 **11%**를 담당하는 **산림부문 감축목표(3,200만톤)**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 강화**
 -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세분화된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체계 구축('24.下)**
* 협의회 등에서 목표·이행방안 설정 후 '시·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반영
 - 산림부문 **탄소흡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국제 자발적 시장과 연계하고 **ESG경영, 탄소거래플랫폼 활용*** 등으로 **민간참여** 촉진
* 산림탄소상쇄제도로 얻은 탄소흡수량을 민간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협의(대한상공회의소 등)
- (생물다양성) **희귀·특산식물 보전('23: 648종 → '24: 788종)** 및 **자생식물**을 활용하는 **산림생태 복원**을 활성화하여 **생물다양성 강화**
 - 국가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수목원을 국가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지원하고, 난대·새만금 등 **국립수목원** 조성
 - 문화재, 국립공원 내 산림도 **자생식물**로 복원하고(부처협업) **맞춤형 복원***과 **유해종 제거** 등 **사후관리**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 (문화재) 천연기념물 후계목 등을 활용한 서식지 복원 (국립공원) 산불피해지 생태복원 등
 - **전통사찰 숲** 등 생물다양성이 높은 **산림의 조사·보호**를 확대하고 **멸종위기 침엽수종(구상나무, 눈썹백 등), 보호수(약 13천그루)** 등 보전 강화
- (산림보호)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등의 **체계적 이행** 기반 마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등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생태환경 등의 **통합관리**를 위한 '**산림생태지도**' 제작
* 산림보호지역 : ('23) 76만ha → ('24) 77만ha (전체 산림면적의 12%)
 - 휴양림 등 **생물다양성이 높은 공익용산지**를 **OECM***(준보호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마련**(「산림보호법」 개정) 및 **밭갈·지정 추진(34만ha 추산)**
* 보호구역 외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주(3만명, 9만ha 추산)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추진(「산림보호법」 개정)
* 산림보호구역은 공익적 목적으로 산주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국가가 해당 산주들에게 공익가치 창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

4 산림경영의 디지털화와 첨단 연구·개발 강화

- ◇ 산림공공데이터 개방률 : ('23) 71.6% → ('24) 84.3%(+12.7%p)
- ◇ 산림 R&D 사업화 기술이전 : ('23까지) 141건 → ('24까지) 156건(+11%)

[산림경영의 디지털 전환 촉진]

- (디지털화)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디지털 산림 플랫폼' 본격 구축
 - 산림경영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의사결정을 과학화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축('26)을 위한 중장기 전략('24.上) 및 법적근거* 마련 추진
 - 3차원 기반의 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입체적 산림관리 추진 및 가상의 환경 내 미래의 산림경영 및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디지털트윈' 실증(11월)
 - * 산림부문 지능화정보기술 개발적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규정(「산림기본법」 개정, '24.下)
 - 광역의 산림관리를 위한 농림위성('25 발사)을 개발하고 '국가산림위성 정보활용센터'(6월 준공), 활용기술(산림재난대응 등 27종) 등 기반 구축
- (스마트화) ICT,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산림경영의 스마트화 촉진
 - 산림경영을 인력중심에서 첨단기술로 전환하기 위해 위성, 사물인터넷, 라이다 등을 산림 현장에 접목하고 인공지능화 촉진*('24~'26)
 - * 산불피해면적 등 산정, 산림병해충 확산예측, 식물의 개화단풍 시기 등을 인공지능으로 산출
 -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임업직불제 신청 등 산림 행정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제공하는 '임업-in 포털'* 서비스 개시(11월)
 - *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소득금액증명(국세청), 주민등록정보(행안부) 등 25개 부처 56종 데이터 연계
- (빅데이터) 산림경영 디지털·스마트화의 근간이 되는 빅데이터 구축 확대
 - 산림공간·자원 정보의 데이터화와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관리 촉진
 - 산림수계수치지도*, 산림경관지도, 산림물지도 등 전국 산림의 현황을 데이터로 조사·구축하는 '디지털 산림지도' 제작
 - * 산림수계지도(산림계곡정보), 유량관측망(돌발홍수, 집중호우 실시간 관측)으로 산사태 예측력 강화
 -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등 소유 주체에 따라 분산 관리되던 산림경영 실적을 '산림경영이음 시스템' 으로 수집·관리 및 국가온실가스감축 기여('24.上)
 -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현황, 산촌분석데이터* 등 산림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23: 2,119건 → '24: 2,497건)하여 민간창업 및 산촌활성화 등 지원
 - * 유동인구, 산촌 인프라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산촌 역량강화 컨설팅, 귀산촌 정책 수립 등 활용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산림을 첨단산업으로 전환]

- (연구·개발) 기초·원천기술 등 세계수준의 산림과학·기술 육성
 - 산불 등 산림재난대응,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국산화 등 기초·원천 기술을 육성하고 정책역량 강화에 필요한 연구 신규 착수(66과제)
 - 중·고층 목구조물 기술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고 차세대 기술로의 성장 잠재성이 큰 중·대형 연구과제 확대('23: 3개 → '24: 17개)
- (시스템) 미래 선점형 도전·혁신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산림R&D 제도 개선
 - 산림청과 산·학·연이 함께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5월)하여 산림과학기술 투자 방향 및 전략 설정
 - * 산림임업 원천기술부터 융·복합 대형연구 등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연구과제 발굴
 - 실적이 저조한 연구개발 사업은 상시 구조조정(하위 20%)하고, 평가 체계를 선진화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 제고
- (성과확산) 'R&D-인재양성-첨단산업화'가 선순환되는 성과확산체계 구축
 - 대학, 기업, 협회·단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24.上) 우수 연구 인력을 산림산업 현장에 연계하고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
 - 산림생명자원 등 각종 연구·개발성과는 산업계에 이전하여 첨단산업화 촉진

[산림생명자원을 바이오경제 핵심으로 육성]

- (기반구축) 산림생명자원 확대(245만점) 및 산업화기반 조성
 - 수집·보존 기관별로 유망 산림생명자원을 확보*하여 다양성 증진
 - * (국립산림과학원) 종자, 미생물 (국립수목원) 영양체, 표본 (품종센터) 종자, DNA 등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권역별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촉진
 - * (나주 '24준공) 난대 산림 특화 (진주 '25준공) 한방·항노화 특화 (춘천 '26준공) 북방계 산림 특화
- (산업화)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이전 등으로 바이오산업 활성화
 -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는 소재개발·원천기술 연구확대('23: 13종 → '24: 25종)
 -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23~'25)하여 산림바이오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특허기술 이전 및 실용사업화, 창업 촉진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양자산림협력 지평 확대 :

(‘23) 아시아 위주 39개국 → (‘24)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

◇ 산림선도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산림ODA 확대 :

(‘23) 196억원 → (‘24) 269억원(+37%)

[국가 외교 전략에 부응하는 한국형 산림협력 모델 확산]

□ (양자협력) 협력국과 공동번영을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산림협력 전개

- 정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태평양도서국(피지, 솔로몬제도), 유럽(그리스), 중·남미(콜롬비아, 수리남), 아프리카(가봉) 등으로 양자산림협력 저변 확대
- 기존 양자협력국(39개국)과는 국경을 초월한 다층적 협력 강화
 - ‘한국-독일 임업기술협력’* 50주년을 기념하여 성과를 재조명하고 개발도상국 산림 공동복원 등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로 확대
 - * ‘한·독 산림경영사업 협정(‘74) 체결 후 독일이 재정·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녹화에 기여
 -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등과는 산림재난 공조,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관계를 고도화하고 정책·과학기술·인력 등 교류 활성화

□ (다자협력) 유엔 등 다자무대의 산림협력을 선도하여 글로벌 녹색 중추국가 입지 강화

-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기구 협력사업* 이행을 강화하여 한국의 선진 산림정책 확산 및 ‘유엔 산림전략계획’ 등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
- * 산불 등 통합산림위험관리(유엔식량농업기구),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생태계복원(생물다양성협약) 등
- 유엔기후협약 등 국제기구 협상과 다자협의체(산림·기후파트너십 등) 논의를 선도하여 산림재난, 생물다양성 등 국제산림협력 아젠다 주도

□ (공적개발원조)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산림ODA 강화

- 산림재난 대응, 산림복원 등 개발도상국 역량을 강화하는 신규ODA* 추진
- * ‘24년 신규 산림ODA 국가 : 가이아나, 과테말라, 토고, 태평양도서국(14개국)
- 우리나라의 선진 산림정책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산림 관계자 초청 교육(‘24.下), 국토녹화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추진

[산림 분야 탄소국외감축사업 본격화 및 해외산림자원 공급망 강화]

□ (국외탄소) 해외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30: 5백만톤) 달성을 위한 **REDD+**(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이행 기반 구축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의 원활한 시행(2.17)을 위한 전담기능 강화 및 하위법령 제정(2월), 운영표준(6월)·사업자신고제(12월) 등 적기 마련

* REDD+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국가책무, 사업자 지원 등 규정

○ 라오스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할 수 있는 REDD+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의 참여 촉진

○ REDD+ 사업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아프리카 지역으로 신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역량배양* 지원

* UN-REDD 프로그램(‘23~’27), 중앙아프리카 산림이니셔티브(CAFI) 등 연계

□ (자원·안보) 해외산림투자 활성화와 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제도 강화

○ 국외 산림 탄소배출권 사업 확대 등 해외산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조달 체계인 ‘산림분야 모태펀드’* 신설 추진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고 예산확보 및 운용지침 마련(‘24.下)

○ 공급망 교란, 자원주권주의 강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목재수급을 위한 ‘해외산림자원 비축제도’* 도입 여건 조성

* 해외조림 기업을 통해 해외산림자원을 확보하고 비축시설 조성 추진(‘24.下)

○ 북한 산림복원*에 필요한 묘목, 종자, 기술 등 통일역량 증진

* 북한 산림면적 939만ha 중 262만ha(28%)가 황폐화된 것으로 분석(‘18, 산림청)

□ (교역) 산림전용 방지 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계의 역량 확보

○ 합법벌채 입증 요구 강화에 대응하여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법* 및 국내 여건에 맞는 산림전용 무관성 입증체계 마련

* 산림전용 방지 등 강화하는 목재교역기준에 맞게 체계적인 수입목재 관리제도 마련

○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산림전용 방지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 간 교섭 강화, 교역 가이드 개발 등 추진

06

2024년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2. 20.(화) 06:00

배포

2024. 2. 19.(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 AI 활용 24시간 산불감시 및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안전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① 산림재난 대응 강화, ②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④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⑤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1: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km)를 확충하여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AI 산불감시: ('23) 동해안 중심 10개소 → ('24) 경북, 강원 등 30개소

** (행안부) 급경사지 (국토부) 도로사면 (농식품부) 농지 (산업부) 발전시설 (환경부) 국립공원 등

***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 체계 → (개선) 주의보·예비경보·경보 3단계 체계

더불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되어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산불피해 발생 → 산사태, 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 → 피해목 대량 발생 → 산불피해 급증

【전략 2: 임업인 소득 증대 및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하여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정비하여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 현재 발의된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총 1.4만 임가가 세금 개선 혜택 전망

** 대상 면적: 임산물생산업(3ha 이상→1ha 이상), 육림업(30/100ha 이상→10/50ha 이상)

*** 청년포럼 운영, 멘토링,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 해외 단기연수, 창업대회 등 정책지원

**** (2월) 외국인력 도입·직업능력개발 관련 산림청-한국산업인력공단 MOU 체결 → (7월)

사업주가 고용부(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9월~)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실시 후 현장 투입

더불어, '동서트레일'* 일부구간(태안~서산, 49km)을 개통할 예정으로 국내 3천2백만 등산·트레킹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출산·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의 장거리 트레일

** 산림치유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치유법」으로 분법

【전략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 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산주 등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증된 흡수량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 목조건축 1동(100m)은 탄소 40톤(자동차가 서울-부산을 약 40회 왕복 시 배출량) 감축 효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

*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천연기념물) 산림훼손지 신규 복원추진

【전략 4: 산림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분야 첨단 연구·개발 강화】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또한, 올해 7월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여 농림위성('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림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율: ('23년) 72% → ('24년) 84%

아울러,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중·대형 연구과제(총 연구비 15억 이상): ('23년) 3개 → ('24년) 17개

【전략 5: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24.2월 시행)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 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물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 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발도상국의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실 | 책임자 | 과 장 | 이준산 (042-481-4050) |
| | 기획재정담당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하지수 (042-481-4051) |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비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

목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



산불·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임업인 소득증진
(23) 3,827만원 ▶ (24) 4,000만원



산림복지 이용인구
(23) 2,536만명 ▶ (24) 2,711만명

| 5대 전략 | | 12대 세부과제 |
|-------|--|---|
| 1 | 일상화,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 - 빈틈없는 산불 대응체계 구축 - 극한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대응체계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병해충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 |
| 2 | 임업인의 소득을 제고하고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 -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정책지원 확대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두터운 산림휴양·치유 복지 확대 |
| 3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 | -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활성화하여 녹색성장 견인 - 저탄소 실현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산림역할 강화 |
| 4 | 산림경영의 디지털화와 첨단 연구·개발 강화 | - 산림경영의 디지털 전환 촉진 -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산림을 첨단산업으로 전환 - 산림생명자원을 바이오경제 핵심으로 육성 |
| 5 |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확대 | - 국가외교 전략에 부응하는 한국형 산림협력 모델 확산 - 산림 분야 탄소국외감축사업 본격화 및 해외산림자원 공급망 강화 |